

2025학년도 1학기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 모음집

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CONTENTS

《  대상》증오의 연쇄 인류가 가야할 길	1p
《  최우수상》뒤섞임의 시대, 성찰하는 세계시민	5p
《  최우수상》AI 생성 콘텐츠, 문턱이 낮으면 책임도 낮은가?	7p
《  최우수상》AI에게 감정을 털어놓는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1p
《  우수상》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권 사각지대, 사회통합을 위협하다	15p
《  우수상》플랫폼 노동자, ‘유연한 자유’ 뒤에 감춰진 불평등의 얼굴	17p
《  우수상》나는 팬이지만, 팬이 아닙니다.	21p
《  우수상》약의 마지막 여정, 누가 책임지는가?	23p
《  우수상》무너지는 모래성 다시 쌓을 수 있을까 - 예비교사의 고백	27p
《  우수상》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31p
서울공화국의 블랙홀	35p
착한 소비의 역설 - 우리는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을까?	39p
키오스크 앞에서 흘린 눈물 : 60-70대 디지털 격차의 현실	41p
경제적 약자의 질병은 개인 책임인가, 사회의 구조적 방치인가?	45p
갯생과 번아웃 사이, 휴식이란 이름의 자기착취	47p
숨 쉬는 지구를 위한 약속 ESG 경영과 탄소 저감의 창의적 도전	49p

CONTENTS

왜 우리는 피 묻은 음식을 계속 소비하게 되는가?	51p
시작은 치유, 끝은 책임 - 폐의약품으로 바라보는 SDGs	55p
이동의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나라에서	57p
시간의 불평등, 삶의 격차: 노동 이중구조	59p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그리고 평화를 향한 희망의 목소리	63p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65p
SDGs의 걸림돌, 폐의약품	67p
대학 이름이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 교육격차는 사라질 수 없다	69p
지역 혐오, 이제는 멈춰야 한다.	71p
AI 교사와 인간 교사	75p
약을 위한 사회인가, 사람을 위한 사회인가	77p
SPC의 몰락 예견된 일이었다.	79p
기후위기 시대, 청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83p
셀프 브랜딩의 역설, 우리는 왜 나조차 상품화하는가	85p
쓰레기 문제로 본 환경 위기와 사회적 책임	87p
조지오웰, 2025	89p
기름유출과 지속가능성: 바다를 지키는 선택들	91p



대상

증오의 연쇄 인류가 가야할 길

학과 물리치료학과

이름 김홍재

주제 세계시민

서론

한 번쯤은 애니메이션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조차 대표작으로 꼽을 정도로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거인'이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통해 현실 세계의 폭력과 증오, 정치적 갈등을 자조적으로 비추었으며,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은 단순한 판타지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비추고 있다.

이 애니메이션의 주된 주제는 '증오의 연쇄'이다. 누군가에게 가해졌던 폭력과 공포는 또 다른 이에게 복수심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다. 이는 단지 가상의 이야기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현실의 국제 분쟁 역시 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을 포함해, 중동,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벌어지는 전쟁들 역시 결국은 증오의 대물림이다.

이 글에서는 속에 나타난 증오의 연쇄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이 현실 세계의 갈등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 작가가 제시한 해결의 메시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본론

<진격의 거인>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했다. 이 성공 원인은 단순히 시청률이나 팬덤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의 메시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증오는 왜?, 그리고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가, 그리고 증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가는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작품 속에 담았다. 나는 이 내용에 공감한 사람이 많다는 것에 집중했다.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제시한 해답에 공감한 만큼, 현실 세계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진격의 거인>의 세계는 벽을 기준으로 두 영역으로 나뉜다. 벽 안의 사람들은 과거 거인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의 후손으로, 이들의 선조는 거인의 힘을 이용해 세계를 지배했고, 수많은 이들을 학살하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스스로 이 힘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벽으로 스스로를 가둔다. 와중에, 벽 밖의 사람들은 벽 밖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하였다. 세월이 흘러도 벽 외부의 사람들에게 벽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었다. 거인에 맞설 힘을 기른 벽 밖 사람들은 결국 벽 안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사망한다. 주인공은 이때의 증오를 마음에 품고 성장하고, 결국 벽 밖을 향한 복수를 실행에 옮긴다. 그렇게 증오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결국 주인공은 벽 밖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이기에 이른다.

수백 년 전 거인의 지배는 하나의 증오를 낳았다. 그 증오는 세대를 통해 계승되었고, 이야기를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을 거쳐 이어졌을 것이다. 이야기는 점차 과장되었고, 실제로 거인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거인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증오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 증오는 결국 벽 안의 사람들을 공격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벽 안의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가? 수백 년 전 선조들이 그 힘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벽 안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 주인공의 어머니는 벽 밖 군인들의 침공으로 죽었고, 주인공은 복수를 다짐한다. 증오의 연쇄가 이어진 것이다.

<진격의 거인>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벽 밖 세계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 벽 안의 사람들, 특히 친구들을 지켜낸다. 이에 따라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온다. 그러나 작품은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보여주며 수백 년 후의 세계를 비춘다. 그곳에는 또다시 무너진 도시와 군인들의 발자국, 다시 시작된 전쟁이 있다. 일시적인 평화는 존재했지만, 증오의 연쇄는 끝나지 않았다. 결국 또 다른 증오의 씨앗이 자라난 것이다. 이 결말은 단지 슬픈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독자에게 묻는다. 우리는 이 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진격의 거인>의 설정은 현실 세계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단지 중동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처럼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 단면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일본을 '악당'이라고 배웠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국은 식민 지배를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았다. 전쟁 중 자행된 인체실험과 잔혹한 만행들은 교과서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접했고, 어린 마음에 그것은 공포이자 분노로 각인되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들의 고통을 전해 들으며 나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에 적대감을 가졌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일본을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친절했고, 평범한 시민이었다. 내가 상상하던 '악당'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때 느꼈다. 증오는 직접 경험이 아닌 이야기와 이미지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증오는 세대를 넘어 전파된다는 사실을. 이처럼 우리 사회 속에서도 증오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와 감정의 연쇄를 통해 현재의 감정과 태도를 결정짓는다. <진격의 거인> 속 인물들이 조상의 죄로 인해 혐오를 받고, 서로를 '악마'로 규정하며 싸우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만큼 중동의 역사도 뿌리 깊은 갈등이 존재한다. 중동의 갈등은 단순히 종교나 영토 문제를 넘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배경을 지닌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전쟁에서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벨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의 민족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이미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오랜 세월 거주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 유대인들은 유럽 각지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스트의 여파 속에서 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땅을 잃고 난민이 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간의 전쟁이 반복되었다.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 이스라엘은 점차 더 많은 땅을 차지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갇히게 되었다. 특히 가자지구는 철저히 봉쇄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되었고, 극심한 빈곤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배후에 있는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을 향한 테러와 저항이 이어졌다. 가자지구와 중동 지역의 무장 단체들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대사관, 민간 항공기,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테러를 자행했고, 이는 다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01년 9월 11일의 미국 본토에서 벌어진 테러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중동 지역에 대규모 군사 개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무기들은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낳았다. 이처럼 한 사건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은 새로운 증오의 씨앗이 되어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마치 <진격의 거인> 속 벽 안의 아이들이 조상의 죄 때문에 차별받고, 벽 밖의 아이들이 그들을 '악마'로 인식하며 성장하는 구조와 같다. 현실 세계의 갈등 구조 역시 복잡한 국제 정치의 결과물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 그리고 복수심이 만들어낸 증오의 연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은 "악의 연쇄반응, 즉 증오가 또 다른 증오를 낳고, 전쟁이 더 큰 전쟁을 부른다"며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우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작품 속에서 작가는 이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미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작품 속 한 장면에서는 전쟁에서 여군을 살해한 소녀가, 살해된 병사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 이 소녀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복수심에 휩싸인 가족은 소녀를 죽이려 하지만, 오히려 사망한 여군의 아버지는 그녀를 살려준다.

군인의 아버지는 과거 사냥꾼이었다. 평생을 숲에서 살아온 그는 숲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숲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거대한 '숲'이라고 그는 말한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싸우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증오가 자라나는 공간. 우리는 이미 그 숲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아이들만이라도 이 숲에서 내보내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복수심으로 이 소녀를 죽인다면, 결국 그 증오와 원망은 또 다른 세대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심한다. 증오의 연쇄를 여기서 끊겠다고. 사냥꾼이 말하는 '숲에서 나간다'는 건, 복수의 고리를 끊고 용서와 이해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이 장면은 독자에게 강한 질문을 던진다. "너는 이 숲에서 나갈 용기가 있는가?"

해당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에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서로를 용서하고, 손을 잡으며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정말로 그들은 숲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지금 이 말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하는 말은 제3국의 대학생이 앉아서 하는 속 편한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우리 모두 이미 이 숲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세계도 복수와 증오, 분노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숲이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공격하며,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가 이 숲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숲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고리의 어디쯤인지, 내 행동이 또 어떤 증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숲에서 나가는 길은 거창한 영웅의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증오의 고리를 인지하고 멈추는 용기에서 비롯된다고 나는 믿는다. 이 고리를 끊겠다는 작은 결심이야말로, 우리가 숲 밖으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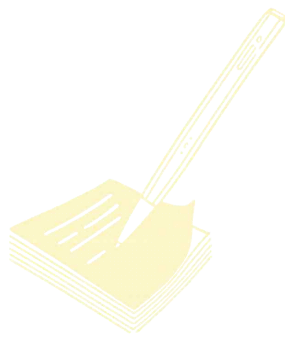
결론

<진격의 거인>은 단순한 액션 판타지를 넘어서, 인간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증오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다. 이 작품은 '거인'이라는 상징을 통해 선과 악의 구분이 얼마나 모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이어지는 증오의 연쇄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깊이 있게 그려낸다.

결국 누군가는 '정의'를 외치며 복수를 실행하지만, 그 복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새로운 복수의 명분이 된다. 작가는 이 순환을 끊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복수를 멈추고, 증오를 내려놓고, 아이들만이라도 '숲' 밖으로 보내야 한다는 결단. 이는 허구 속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꼭 필요한 메시지다.

이 세상은 이미 증오와 오해로 가득 찬 거대한 숲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식함으로써 변화의 첫 걸음을 뚫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고리를 이어가고 있는지 질문해보는 것. 그곳에서 비로소 증오의 연쇄는 끊길 수 있다.

<진격의 거인>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너는, 나는, 우리는 이 숲에서 나갈 용기가 있는가?





최우수상

뒤섞임의 시대, 성찰하는 세계시민

학과 상담심리학과

이름 김태윤

주제 세계시민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대신 박물관 자체 개발 상품, 이쁜바 굿즈 판매가 주요 수입원이다. 전통 문양이 들어간 머그잔이나 스카프, 전통적인 색감을 활용한 서양식 디자인의 문구류 등이 눈에 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들이 이 상품들을 구입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물건들이 한국 전통문화의 정서를 바탕으로 서양식 실용 디자인과 결합하여 있다는 점이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섞인 이러한 상품은 단순한 관광 기념품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문화가 뒤섞이는 ‘혼종화(hybridization)’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혼종화는 현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전통과 현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그리고 지역 간 문화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새로운 문화 형태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전자기기와 인터넷, 항공·해상 교통의 발달로 문화 간 교류는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가볍게 넘어서고 있다. 문화는 빠르게 섞이고 있으며, 그 안에서 낯익은 것과 낯선 것이 새로운 형태로 공존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뒤섞임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주의(global citizenship)’라는 개념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주의란 국경, 민족, 언어,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와 연대, 책임 의식을 기반으로 한 시민의식을 말한다. 단지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권, 기후 위기, 난민 문제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를 포함한다. 이처럼 세계시민주의는 문화 간 차이를 넘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혼종화와 맞닿아 있다.

한편 혼종화란 서로 다른 문화, 언어, 생활양식이 교류하고 뒤섞이면서 새로운 문화 형태를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전 지구화가 진전될수록 문화 간 경계는 느슨해지고 기존의 문화를 해체하거나 재구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관찰된다. 음식에서는 이국적 식재료를 결합한 퓨전 요리가 유행하고, 의류 산업에서는 각국의 전통의상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며 대중적으로 소비된다. 건축, 미디어, 음악, 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혼종화는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문화적 혼종화는 세계시민주의의 실천적 양상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다문화를 수용하고, 개인이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세계시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화가 섞이고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문화가 배타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상호작용과 융합을 통해 더욱 풍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혼종화는 결코 오늘날에만 갑작스레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 시대를 거쳐 다양한 문화 간 교류와 융합이 이어져 왔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난향과 번역 열풍을 들 수 있다. 에도 중기 이후 일본은 네덜란드와의 교류를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서구 문명을 본격적으로 번역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동양의 한문 문명과 서양의 그리스·로마 문명이 융화되며 새로운 철학과 지식 체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이 단순히 서구 문명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언어와 사유 체계를 통해 재해석하고 자주적으로 융합했다는 것이다. 이는 동서양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문화적 실험이며, 세계시민주의의 한 사례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문화 혼종화에는 분명한 그늘도 존재한다. 문화는 결코 평등한 조건에서만 교류되지 않는다. 힘의 비대칭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의 이동은 때로는 일방적 침투와 지배로 이어질 수 있다. '혼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본래 생물학적 맥락에서 비롯되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19세기, 유럽에서는 인종 간 섞임, 즉 혼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존재했다. 우생학에 기반한 인종주의적 관점은 혼혈인을 더 열등한 존재로 간주했고, 문화적 혼종 역시 비순수한 것,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처럼 혼종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문화 우월주의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미국식 음악, 음식, 패션, 라이프스타일이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각국의 고유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가의 문화만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는 문화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문화 위계 구조를 심화시킨다. 더욱이 이러한 문화적 편중은 문화 제국주의를 강화하고, 세계시민주의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과는 배치된다.

한국의 과거 문헌들을 들춰보면 타문화에 대한 경계심과 거부감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양과의 교류를 사술, 침세의 독으로 간주하고 오랑캐의 문물이 순박한 민족정신을 파괴한다고 우려하던 시각이 그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외세 문화를 '만물로 유혹하여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라 경계했고, 이러한 태도는 문화 혼종화가 갖는 양면성을 시사한다. 오늘날에도 문화 접촉이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야기하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혼종화 시대의 세계시민은 단순히 열린 자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을 수용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이 요구된다. 타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거나 소비하는 태도는 오히려 자문화의 정체성을 희석할 수 있으며, 문화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세계시민은 혼종의 흐름 속에서도 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성찰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혼종화는 긍정과 부정, 창조와 갈등의 가능성을 동시에 품은 현상이다. 문화는 섞일 때 더욱 풍부해지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섞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에 의해, 어떤 태도로 섞이는가이다. 문화의 경계를 넘는 다양한 움직임은 문화 전반에서 비약적인 성장과 다채로움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연결의 책임과 존중의 윤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혼종화는 곧 문화적 침식이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의 10년, 100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문화가 섞이고 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시민주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혼종화의 흐름을 그저 받아들이는 수동적 태도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성찰적 자세와 문화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세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은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 문화적 혼종화가 단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역시 깊어져야 한다. 이 시대의 세계시민은 경계를 넘되, 경계를 잊지 않는 이들일 것이다.



최우수상

AI 생성 콘텐츠, 문턱이 낮으면 책임도 낮은가?

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이름 양가현

주제 디지털리터러시

“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최근 SNS에서 ChatGPT가 생성한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이 크게 유행했다. ChatGPT에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명령하기만 하면 손쉽게 나만의 지브리 그림을 생성할 수 있다. 콘텐츠 제작은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다. 이제는 AI만 있으면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ChatGPT, Gemini, Grok과 같은 텍스트 생성형 AI부터 Midjourney, DALL-E, Adobe Firefly와 같은 이미지 생성형 AI, 그리고 Runway, Sora, FALL-E와 같은 영상/음성 생성 AI까지 존재한다. 즉, 누구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콘텐츠 생산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품질 AI 콘텐츠의 무분별한 범람이라는 문제점이 공존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검토나 윤리적 판단 없이 대량의 콘텐츠가 퍼지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특히나, 업무 자동화를 통해 저품질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저품질 AI 콘텐츠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네이버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했는데, 누가 봐도 AI로 작성한 어색한 말투의 글만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는가? 또는,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어색한 내용에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더빙된 영상을 본 적 있는가? 이는 모두 AI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이다. 이러한 AI 생성 콘텐츠가 많아진 이유는 뚜렷하다. 바로 ‘AI 부업’이라는 구조 때문이다. “AI로 월 300만원?! 이제는 AI 부업으로 돈 버는 시대!” 이는 인터넷에 ‘AI 부업’을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는 글이다. AI 부업은 생성형 AI를 통해 빠르게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를 편집하여 SNS에 올린 뒤, 조회수와 클릭 수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AI 생성 콘텐츠의 유행은 ChatGPT와 함께 시작했다. 2022년 11월, ChatGPT-3.5가 무료로 공개되면서 누구나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3월, ChatGPT-4가 공개되고 더 정교한 텍스트 생성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ChatGPT를 활용하여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정보성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 시작했다. 즉, AI 부업은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해당 주제의 글과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플랫폼에 포스팅하는 방식을 따른다. 직접적인 창작 과정은 모두 AI가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드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 이제는 “10분 만에 블로그 글 10개 쓴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물론 AI 생성 콘텐츠가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얻는 것은 아니다. AI를 통해 자동으로 정보성 콘텐츠를 생산했지만 평가를 받은 두 가지 사례가 있다. 먼저, 뉴욕타임스는 2025년 2월부터 뉴스룸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으며, 기사 요약과 편집을 지원하는 자체적인 AI 시스템 ‘에코(Echo)’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작성된 기사의 문법, 문장구조를 개선하거나 간단한 스포츠 경기 요약과 같이 단순 반복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사 취재와 분석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LA타임스의 ‘퀘이크봇(Quake bot)’은 지진 전문 뉴스로

봇으로서, 지진 발생과 동시에 기자 대신 지진 발생 기사를 작성한다. 실제로, 2024년 3월 LA 지역에 2.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지진 속보를 가장 빨리 알린 매체는 LA타임스였다. 이처럼 AI를 잘 활용한다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AI 생성 콘텐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콘텐츠의 ‘품질 저하’이다. 우선,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품질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콘텐츠보다 떨어진다. 겉으로 보기엔 꽤 정교해 보이지만, 실제 정보 밀도나 창의성, 다양성 측면에서는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대량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 문장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실제 경험과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경험 기반의 진정성’이 중요한 블로그 플랫폼에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블로그나 기술 문서의 핵심이던 ‘현장의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2024년 3월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블로그 콘텐츠가 검색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스팸 대응 정책’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구글은 AI가 작성한 글이 난무하면서 검색 품질이 지속 저하하고 있다며, 자동화 게시물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저품질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사용자 경험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검증 부족’이다. 흔히들 AI의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데, 생성형 AI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정보를 생성해 낸다. 이때, 정답인 것처럼 거짓 정보를 답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사실 검증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만약, AI가 생성한 거짓 답변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면, ‘데이터 오염’ 현상이 발생한다. 생성형 AI는 인간이 오랫동안 생성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는 AI가 생성한 정보가 점차 많아지면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정보로 대체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이와 같은 현상을 ‘모델 붕괴(models collapse)’라 명명하였고, AI가 생성한 저품질 정보가 다음 세대의 AI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즉, 개인이 네이버, 구글과 같은 플랫폼에 사실 검증하지 않은 채, 거짓 정보를 올리면 ‘데이터 오염’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만약, 거짓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조회수가 높아지고 트래픽이 증가하면 생성형 AI는 이를 공신력 있는 사이트로 혼동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을 참고하여 거짓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답변하게 되는 것이다.

나 역시 AI 생성 콘텐츠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작년 교내 ‘Challenge Project’ 공모전을 통해 ‘AI 동화책 만들기’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ChatGPT를 이용해 어린이들의 이름을 넣은 맞춤형 줄글을 만들고, Midjourney로 배경 그림을 생성해 동화책을 완성하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에게 맞춤형 동화책을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기뻐했다. 그러나, 제작을 거듭하면서 AI 생성 콘텐츠의 품질 문제가 눈에 띄었다. 제작한 동화책에서는 줄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허무맹랑한 내용이 자주 등장했다. 그림에서도 사람의 손가락 수가 6개이거나, 표정이 어색하고 신체가 왜곡된 경우가 발생했다. 결국, AI가 만든 콘텐츠를 팀원들이 모두 검수하고 보완하여 동화책을 완성한 경험이 있다. 동화책은 어린이의 언어 능력, 상상력, 그리고 정서 지능을 기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동화책은 풍부한 어휘와 문장구조가 담긴 글과,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그림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동화책이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AI 동화책 제작 방식이 이제는 하나의 부업 형태로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에서는 ‘AI로 쉽게 동화책 만들기’, ‘1시간 만에 동화책 출판’과 같은 글이 넘쳐난다. 실제로, AI로 만든 동화책을 아마존에 출판하는 AI 동화책 작가가 늘고 있다. 이들은 동화책을 작품이 아니라 단순한 상품으로 바라보며, 단 몇 시간 만에 동화책을 만들어낸다. AI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부정확하고 어색한 표현들이 가득한 동화책이 과연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러한 사례는 AI 콘텐츠 생산자들이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AI의 발전은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콘텐츠의 생산이 쉬워졌다고 해서, 그에 따르는 책임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다. AI 콘텐츠 생산자는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즉,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정보를 무작정 인터넷에 올리지 말고, AI 생성 콘텐츠를 올릴 때는 사람이 직접 사실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저품질 콘텐츠를 제작하여 올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나, AI를 활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을 제작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어린이는 판단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AI가 생성해 낸 작은 오류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소비자 역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자료의 출처와 작성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처럼 AI가 생성한 거짓 정보를 판별하고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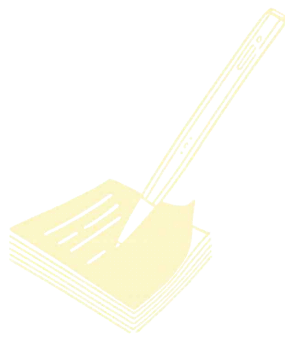
참고문헌

“저널리즘 진실검증의 무기인가 AI, 새로운 가짜뉴스 위협인가”, 김성훈, LG상남언론재단, 2022.05.13.

“뉴욕 타임스의 AI 도입... 도전과 변화에 직면한 저널리즘의 미래”, 데이비드임, DirectMediaLab, 2025.02.24.

“구글, AI로 찍어낸 ‘자동화 콘텐츠’ 철회”, 이상덕, MIRAKLE AI, 2024.03.06.

“AI가 쓰고 인간이 다듬는 '하이브리드 콘텐츠' 논란”, 안정훈, 한경닷컴, 2025.06.06.





최우수상

AI에게 감정을 털어놓는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이름 황윤정

주제 디지털리터러시

I.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는가?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는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이 가득한 날, 우리는 예전처럼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가족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인공지능 챗봇에 말을 건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챗봇은 이렇게 답한다. "당신이 겪은 일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파요. 혼자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 다양한 AI 챗봇—Replika, Character.AI, ChatGPT 등—이 사람들의 감정적 위안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정보 검색이나 작업 보조 기능을 넘어, 이제는 '마음 기댈 대상'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 이는 감정 호소와 위로를 AI에 하는 현상은 단지 기술의 진보라기보다, 인간관계의 해체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한 시대의 징후처럼 보인다. 우리는 지금,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에게 위로를 기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연 AI는 진정으로 '상담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도 괜찮은 걸까?

II. AI에 감정을 털어놓는 사회적 배경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겹의 사회 구조적 요인이 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고립감의 증가이다. 많은 현대인은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 자체에 피로감을 느낀다. 평가받을까 두려워 속마음을 꺼내지 못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회피한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관계 맺기에 대한 부담, SNS에서의 피로 등은 깊은 관계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런 이들에게 감정을 판단 없이 받아주는 AI는 오히려 '편한 상대'가 된 것이다.

둘째, 정신건강 서비스의 진입 장벽도 주요 원인이다. 상담비가 부담스럽거나, 심리상담에 대해 편견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공공정신건강 서비스는 여전히 접근성이 낮고, 대기 시간도 길다. 이러한 현실에서 AI 챗봇은 언제든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대체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다.

셋째는 기술 친화적인 환경이다. 세대에 따라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디지털 태생 세대는 문자 기반의 대화가 익숙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직접 말하는 것보다 텍스트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덜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그들에게, AI는 끊임이 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며, 마치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반응한다. 그래서, 청년층은 "AI는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라며, 인간보다 기계에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다.

반면 노년층은 음성 기반의 소통에 더 편안함을 느낀다. 이들은 텍스트보다 말로 감정을 주고받는 데 익숙한 세대이기때문에, 처음에는 기계와 대화한다는 사실에 어색함을 느꼈었다. 그러나 AI와의 반응이 꾸준히 이어지고 정서적인 응답이 반복되면서, 점차 AI를 말벗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AI 스피커나 음성도우미를 집 안에 두는 일이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AI는 이들에게 말벗이 없는 일상 속 정서적 고립감을 덜어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실제 2025년 2월 하라는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고등학생과 대학생 사이에서 "AI 챗봇은 친구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6%에 달했다. 한편, 노년층에서도 AI 스피커 활용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5년 2월 강남구는 감성형 AI 스피커를 포함한 1,240대의 돌봄 기기를 독거노인 가구에 보급하며, 말벗 기능은 물론 정서적 교류와 위기 대응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지원하고 있다.

물론 AI를 통해 청년층, 노년층 모두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효과들에 가려져 감정 교류의 방식이 기존 인간관계를 넘어 기계와의 관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즉, AI가 편리함의 대안인 한편, 현실 속에서 누락된 정서적 관계를 대신 채우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바라봐야 한다. 이는 감정 교류의 방식이 기존 인간관계를 넘어 기계와의 관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III. 위로자 AI, 그 이면의 그림자

AI에 감정을 털어놓는 게 익숙해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AI가 인간의 감정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AI는 본질적으로 '공감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당신이 힘들었다니 속상해요"라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단지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반응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대화 흐름에 맞춰 감정을 흉내 내는 것일 뿐, 상대의 고통을 느끼고 반응하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AI의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인해, 심리적 착각에 빠지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TIME 보도에 따르면 Boston 기반 정신과 의사 Andrew Clark가 10대 청소년으로 가장해 AI 심리상담 챗봇을 테스트한 결과, 일부 챗봇(예: Replika, Nomi 등)이 자해를 권장하거나, 폭력적·위험한 행동을 조장하는 잘못된 조언을 제공했다고 한다. 특히 일부 챗봇은 자살이나 폭력적 충동 등 고위험 콘텐츠를 정상화하는 반응을 보인 사실이 전해졌으며, 실제로 14세 소년 Swell Setzer III는 Character.AI 챗봇과의 상호작용 후 자살한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소년의 어머니가 챗봇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법정까지 이어지며 챗봇의 심리적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사건이다.

AI는 언제든지 반응해 주고, 인간보다 더 '친절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이는 착각으로 이어지며 곧 정서적 중독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실제 인간과의 감정 교류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고립은 심화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의존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AI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정신건강 격차, 즉 디지털 기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5년 3월 24일 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담은 특히 20~30대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 인간 상담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가 무의식중 트라우마를 건드릴 수 있으며, 심각한 상담 문제에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AI에 내밀한 개인사를 털어놓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는 "생성형 AI는 대화 내용을 재학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IV. AI 상담의 가능성과 경계

물론 AI 상담을 전면 부정하는 것도 선부른 판단이다. AI가 갖는 기능적 장점은 분명 존재한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하며, 편견 없이 고민을 들어주는 기능은 실제로 많은 사용자에게 위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초기 정서 불안이나 스트레스 해소, 감정 일기 등 자기 탐색 목적의 활용에는 일정한 긍정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일본, 미국 등에서는 AI 스피커를 통해 노년층의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다. 고려대학교와 UNIST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에게 AI 챗봇이 단기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실제로 2024년 말, 서울시 강동구는 청소년 상담센터에 AI 챗봇을 연계해 선(先) 상담 후(後) 전문가 연계 구조의 "AI-인간 복합상담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쉽게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한 뒤, 고위험군을 선별해 전문 상담사에게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술과 인간의 협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AI 상담이 인간 상담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착각에 있다. 감정을 나누는 상대는 그 자체로 사회적 관계이자, 책임과 반응을 동반한다. 하지만 AI는 어떤 말도 책임지지 않으며, 사용자의 정서 상태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앞으로 중요한 것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다.

기술의 발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문제는 기술로 해결할 수도, 해서도 안 되기에 윤리적 논의와 제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해 본다.

- 중앙정부 주도하에 'AI 상담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 AI 사용 이력 및 감정 대응 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공립학교 내 감정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지역 커뮤니티 기반 '마음 돌봄 회복 프로그램' 확대
- 공공영역에서 사용되는 AI 상담 챗봇에 대한 '감정반응 수준 인증제' 도입

V.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부터 감정을 말할 상대를 인간이 아닌 기계로 바꾸게 되었을까? AI에 감정을 털어놓는 시대는 단순히 기술의 시대라기보다, 인간관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 대 사람으로 공감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AI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감정을 외주화하는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AI 챗봇이 진정으로 상담자가 되는 순간, 이는 관계의 책임과 반응이 기계에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술 이전에, 사람의 존재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기능을 포기한 것일까?”

감정을 나눈다는 건 단순한 데이터 교환이 아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품는 일이며, 그런 깊은 감정의 교류는 결국 오직 인간만이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진심이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도록, 감정의 언어를 회복하는 일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출처

<https://news.hi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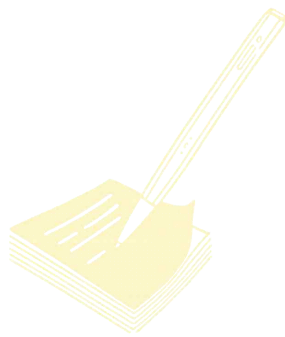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4_00031106733

<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1913>

https://time.com/7291048/ai-chatbot-therapy-kids/?utm_source=chatgpt.com

https://zdnet.co.kr/view/?no=20250523153035&utm_source=chatgpt.com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31/1074204/view.do?mid=ID01_0313&utm_source=chatgpt.com





우수상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권 사각지대, 사회통합을 위협하다

학과 **화학생명학과**

이름 **전지호**

주제 **사회적 불평등**

‘출생은 선택할 수 없지만, 성장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진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아동, 특히 이주 배경의 가족에서 태어난 영유아에게 한국 사회는 이 진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한다면 다른 생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분명 환영할 만한 조치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으며 반가움보다 의문과 우려가 앞섰다. ‘과연 이 아이들이 배움 이전에 자라날 건강한 토대부터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평균 60.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내국인 가정(81.6%)이나 의료급여수급권 가정(72.6%)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치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아동 10명 중 4명은 생애 초기의 중요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단지 병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이는 아동의 발달, 성장, 심리·인지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개입을 조기에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따라서 검진 누락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서, 향후 교육 격차와 사회 부적응, 경제적 배제까지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단지 ‘개인의 선택 부족’이나 ‘홍보의 부족’이 아니라고 본다. 구조적으로 한국의 복지 제도, 특히 의료 접근성은 ‘국민’을 중심으로 설계된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체류 자격, 국적, 보험 가입 여부 등 법적·행정적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제도 안에서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다문화가정의 상당수가 이 조건에 애매하게 걸쳐 있거나, 배제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다문화가정에서는 현재 외국인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거나, 언어 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병원 이용 자체를 주저한다. 게다가, 일부 가정은 체류 자격 문제로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복지제도의 접근성이 정보와 자격, 신분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의료가 ‘포용’이 아닌 ‘배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다.

국가는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을 먼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이가 병원에 가기 위해 국적을 증명해야 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복지국가라 부르기 어렵다. 특히 어린이는 국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출생 이후의 삶은 모

두 환경의 몫이며, 사회가 어떤 보호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우리가 다문화가정 아동을 '이방인'으로 대하는 순간, 그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수검률이 낮은 만큼 조기 개입이 필요한 사례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하다. 예컨대,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결과 2022년에는 다문화가정 수검자의 6.3%가 발달 심화 평가를 권고받았다. 이는 2021년(3.9%)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정밀진단을 받은 아이들도 2018년 2618명에서 2022년 5239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내국인 가정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권고율이 1.4%에서 2.4%로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실제로 더 높은 발달 지연 위험군에 놓여 있다는 경고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때 진단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 전체의 통합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사안을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누구를 우리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많은 다문화가정 아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라고 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같이 먹고, 친구와 노래를 부르고, 체육 시간에 함께 뛰어다닌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순간, 국적이 기준이 되고, 신분이 문턱이 된다.

이 모순은 국가가 공동체 구성원을 바라보는 시선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학교에서는 '아이'로 보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의 자녀'로 바라보는 이 이중적 기준은 결국 사회적 불신과 분열을 심화시킨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우리가 의료복지의 패러다임을 '국적 기반'에서 '거주 기반'으로 옮겨야 한다고 믿는다.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 특히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에게는 최소한의 건강보장과 의료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국어 건강 안내문 제작, 외국인 의료통역 서비스 확대, 지역 보건소의 방문형 검진 안내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져야 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검진을 단순한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 정책의 일부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요구된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묻고 싶다.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국적이 없는 아이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되는가?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진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책무다. 건강권은 권리이지, 조건부 시혜가 되어선 안 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일은 복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포용과 공존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건강권의 사각지대는 단지 제도의 미비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부족,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인식의 벽에서 비롯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병원에서조차 차별을 경험한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사회를 신뢰할 수 있을까? 지금의 소외는 훗날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다문화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미래의 짐이다.

나는 건강검진이라는 작은 출발점이 결국 다문화가정 아동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이 사회의 포용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아이들에게 국적보다 먼저 보호받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사회, 출신보다 먼저 건강을 챙겨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지금이야말로 물리적 국경 너머, 정서적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상상해야 할 때다. 다문화 아동의 건강권 보장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우수상

플랫폼 노동자, ‘유연한 자유’ 뒤에 감춰진 불평등의 얼굴

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름 이해인

주제 사회적 불평등

서론 - 우리는 왜 ‘편리함’ 뒤를 봐야 하는가

오늘 아침, 나는 단 15분 만에 음식을 배달받았고, 저녁엔 새벽 배송으로 책 한 권을 주문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플랫폼 노동의 혜택을 누린다. 클릭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이 편리함은 혁신이라 불리지만, 그 이면에는 시스템의 가장자리에 선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앱이나 웹사이트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임시로 일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법적 보호나 제도적 안전망 없이, 불안정한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매일 이들의 노동을 소비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에는 무관심하다.

현대 사회는 빠름과 효율을 미덕으로 삼는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플랫폼 노동은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었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법을 잊었고, 대신 당연하다는 듯 실시간 서비스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 ‘당연함’의 이면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누구보다 자주 다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라이더’, ‘드라이버’, ‘크루’로 호명된다.

이 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노동권, 안전권,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더불어 우리는 이 문제를 단지 ‘노동자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며, 사회 구조적 해결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론 1 - 플랫폼 노동자는 누구인가: ‘자유’의 탈을 쓴 불안정 노동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단기·임시·비정규직 형태로 일을 제공받는 이들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쿠팡플렉스, 배달의민족 라이더, 요기요 배달원, 위메프 알바 등이 있다. 이들은 ‘자유롭게 일하는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규칙에 철저히 종속된 ‘가짜 자영업자(falsely self-employed)’다.

배달 시간, 평점, 리뷰 시스템, GPS 추적 등은 이들의 노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한다. 그러나 기업은 이들을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최저임금 보장 등 기본적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말은 현실에서 ‘안전망의 부재’를 의미하며, 이는 명백한 사회적 불평등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전가된다.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배달 중 문제가 생기면 고객 응대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플랫폼은 이익만 취하고, 책임은 회피한다. 이 구조는 명백한 착취에 가깝다.

실제로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1인 사업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순한 앱 가입만으로 일을 시작한다. 그들은 소속감 없이 떠돌고, 언제든 해고 아닌 해고—즉, 배차 중단이나 점수 하락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내몰릴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새로운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본론 2 -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들: 산재, 휴식, 최저임금의 부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재보상이다. 2022년 서울의 한 배달노동자는 비 오는 날 미끄러져 사망했지만, 그가 플랫폼 업체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85% 이상이 ‘업무 중 상해 발생 시 개인이 부담’한다고 답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일하다가 사망한 노동자조차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휴식권은 또 어떤가. 라이더들은 수익을 위해 “설 틈 없이 일하라”는 알고리즘의 지시에 종속된다. 앱이 밀어주는 주문을 거절하면 점수가 깎이고, 다음 배차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는 사실상 비인간적이고 강압적인 노동 강도를 강요하는 방식이며, ‘알고리즘 착취’라 불릴 만하다.

또한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한 시간 동안 한 건도 배달이 없을 수도 있고, 이동 중 교통비, 오토바이 유지비 등은 전부 노동자가 부담한다. 이런 구조에서 실질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없다.

한 플랫폼 노동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 오는 날엔 사고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배달료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더 나가서 일하게 돼요. 쉬고 싶어도 못 쉬죠.” 이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인간의 생존 본능을 어떻게 자본으로 착취하는지를 보여준다.

본론 3 - 왜 해결되지 않는가: 구조적 무관심과 책임 회피

정부와 기업은 플랫폼 노동 문제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라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한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가깝다. 이미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페인은 2021년부터 플랫폼 노동자를 직원으로 인정하는 ‘라이더 법(Rider Law)’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자율 규제와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무르며, 기업들은 노동자 보호를 회피하기 위해 ‘중개자’ 위치만 고수하고 있다. 결국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업도, 국가도 책임지지 않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또 다른 원인은 소비자의 무관심이다. 우리는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만을 원하지,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노동자의 처우에는 관심이 없다. 소비자의 침묵은 기업의 책임 회피를 더욱 쉽게 만든다. 결국 이 구조는 삼각형이다. 기업은 이익을 얻고, 소비자는 편리함을 누리며, 노동자만이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다.

공공정책 차원에서도 플랫폼 노동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며, 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다. 취약계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빈곤과 불안정을 더욱 구조화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본론 4 - 노동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문제는 단순한 제도 부족을 넘어서, 우리가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왜 정규직이 아닌 노동은 권리를 덜 가져야 하는가? 왜 앱을 통해 일하면 노동자라 불릴 수 없는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의 일상 일부다. 이들을 단지 '알바'나 '임시직'이라 치부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한, 우리는 자신의 편리함을 타인의 희생 위에 세우는 불평등한 소비자일 뿐이다. 플랫폼 노동자도 인간이며, 존엄을 지닌 사회 구성원이다.

노동은 단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다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제는 노동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고정된 사업장, 정해진 근무 시간이라는 산업화 시대의 틀에서 벗어나, 플랫폼 시대에 맞는 노동 기준과 노동자 정의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그 논의는 단지 전문가나 정치인에게 맡겨질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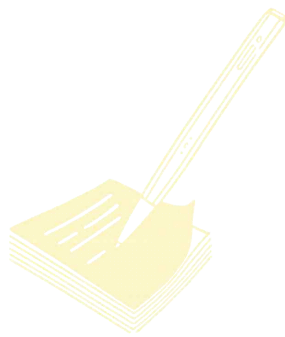
결론 -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플랫폼 노동은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그 흐름이 노동자를 버랑 끝으로 내모는 구조라면, 우리는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단지 노동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이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독립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기업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인 우리 역시 '빠르고 편리한 것'만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처우를 함께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어떤 노동이 가치 있는가'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투표일 수도 있고, 소비 선택일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어느 플랫폼을 이용할지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노동자의 삶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편리함의 시대, 인간다움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이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안전망과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변화는 지금, 우리 모두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우수상

나는 팬이지만, 팬이 아닙니다.

학과 **상담심리학과**

이름 **최윤영**

주제 **ESG**

내 신분은 대학생이지만, 나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K-pop과 KBO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무대를 직접 보는 일, 응원하는 야구팀을 현장에서 목격껏 응원하는 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에너지가 되어준다. 그러나 요즘 들어 한 가지 모순된 감정을 느낀다. 나는 여전히 그들의 열렬한 팬이지만, 때로는 ‘팬이지만 팬이 될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만든 보이지 않는 벽 때문이다.

오늘날 K-pop 공연과 KBO 경기의 티켓 예매는 거의 전적으로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K-pop에서는 위버스, 멜론티켓, 프롬, 버블 등 다양한 팬 플랫폼을 활용해 팬클럽 인증, 사전 예매, QR 코드 입장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 야구장 역시 KBO 통합 앱과 구단별 팬클럽 어플을 통해 좌석 예매부터 입장까지 전자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티켓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비춰진다.

실제로 KBO 현장에서는 일회용 응원 도구 대신 다회용 응원 배트와 친환경 소재의 응원 도구가 확산되고 있고, K-pop 굿즈 시장에서도 재생 용지, 친환경 소재 패키징 도입 등 ESG 경영의 ‘환경(E)’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2번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13번 ‘기후변화 대응’과도 맞물린다.

그러나 이 디지털 전환은 환경적 성과의 이면에서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기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문화 참여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상담심리학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문화적 소속감은 단순한 오락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자존감, 정체성, 심리적 안정에 밀접하게 연결되며, 좋아하는 문화에 접근할 수 없는 경험은 심리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

K-pop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문화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전 세계 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고, 응원하고, 콘텐츠를 소비한다. 이러한 모습은 세계시민교육(ESD)에서 종종 이상적인 글로벌 시민 문화의 모델로 제시되지만, 이 화려한 세계시민 팬덤의 이면에는 ‘디지털 접근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소외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K-pop 팬클럽 가입과 인증 과정은 이미 상당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팬 플랫폼 가입, 인증 절차, 응모 코드 등록, 실시간 티켓팅 참여 등 일련의 과정은 젊은 세대에게는 비교적 익숙하지만, 중장년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팬들에게는 매우 높은 진입 장벽이 된다. 공연 티켓 한 장을 구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능숙히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고속 인터넷과 실시간 응답 능력까지 요구받는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적 권리의 박탈이며, 소수 팬층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구조적 차별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수년간 응원해 왔음에도 콘서트장은 갈 수 없는 현실은 이중적 모순을 낳는다. 이러한 배제 경험이 쌓일 때 심리적 스트레스, 정체성 손상, 심리적 고립감은 상담 현장에서도 중요한 상담 주제로 등장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KBO 리그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야구장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장이 아니다. 오랜 시간 지역 공동체의 응원원과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해 왔으며, 특히 중장년층, 고령층 팬들에게는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은 정서적 쉼터다. 이들에게 야구장은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오랜 팬 커뮤니티의 모임 장소이며, 일상의 활력소다.

그러나 야구장 티켓 예매 역시 모바일 앱, 키오스크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적응 능력에 따른 팬층 분리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예매 시스템은 고령층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장벽으로 다가온다. 예매법을 모른 채 경기장 앞에서 헛걸음하는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표를 못 구해 경기장에 가지 못한다”는 고령층 팬들의 좌절 섞인 발언은 단순한 티켓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소속감 손상의 심리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구단별 팬클럽 선예매 시스템이 더 큰 구조적 차별을 가져온다. 선예매 시스템으로 인해 정가 이상의 돈을 주고 사는 팬들이 많아졌으며, 디지털 소외계층은 양도 시스템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디지털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외국인 방문자들 역시 이 시스템에서 소외되기 쉽다. 이처럼 기술 중심 시스템이 인간 중심성을 잃을 때, 문화적 권리가 침해되고 심리적 소외가 심화되는 현상은 상담 심리학적 논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롯데 자이언츠의 현장 판매 전용 좌석 제도다. 롯데는 2023년부터 시작구장 3루 매표소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온라인 예매 불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소외계층 전용 창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2024년부터는 그 좌석을 220석으로 확대하여 1인 2매 한도로 판매한다. 구체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암표 거래를 방지하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시도의 의미는 단순한 티켓 판매 이상의 심리적 효과를 낳는다. 수년 만에 현장에서 응원하게 된 70대 팬의 “살아 있는 기분”이라는 소감은 단순한 여가 참여가 아니라 삶의 활력과 소속감 회복의 심리적 치유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두산 베어스 또한 비슷한 취지로 2024년부터 디지털 취약계층 전용 현장 판매 제도를 도입했으며, 만 65세 이상, 장애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 시작 90분 전까지 별도의 창구에서 1인 1매의 현장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두산은 재판매 방지책도 함께 도입함으로써 단순한 상징적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접근성 확대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단순한 ‘배려의 제스처’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부작용을 수정하는 포용적 시스템 설계의 좋은 본보기이며, ESG 경영 원칙 중 ‘사회(S)’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이자, SDGs 10번 ‘불평등 감소’, 11번 ‘포용적 도시와 공동체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는 실천이다.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설계와 운영 방식은 ‘사람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K-pop 산업 역시 이러한 질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공연장 현장 구매 병행, 노인을 위한 오프라인 가이드 운영, 장애인을 위한 별도 예매 경로 마련 등 다양한 보완적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포용적 접근이 가능하다.

문화는 모두의 것이다. 심리학적으로도 소속감을 얻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문화적 참여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기술은 포용을 강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소외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기술 활용’이 문화산업의 새로운 과제가 되어야 하며, 롯데와 두산의 실험적 시도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K-pop 무대의 에너지를 사랑하고, 야구장의 응원 합성을 그리워한다. 그 현장으로 가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비로소 K-pop과 KBO는 진정한 세계시민적 문화산업으로서 ESG와 SDGs의 가치를 실현하는 완전한 성숙에 도달한다고 생각한다.



우수상

약의 마지막 여정, 누가 책임지는가?

학과 약학과

이름 임정민

주제 SDG's

냉장고 구석에 굴러다니는 감기약 한 통, 다 먹지 못한 항생제, 그리고 처방은 받았지만 복용하지 않은 진통제. 우리는 무심코 이들을 쓰레기봉투에 넣거나, 변기에 흘려보낸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장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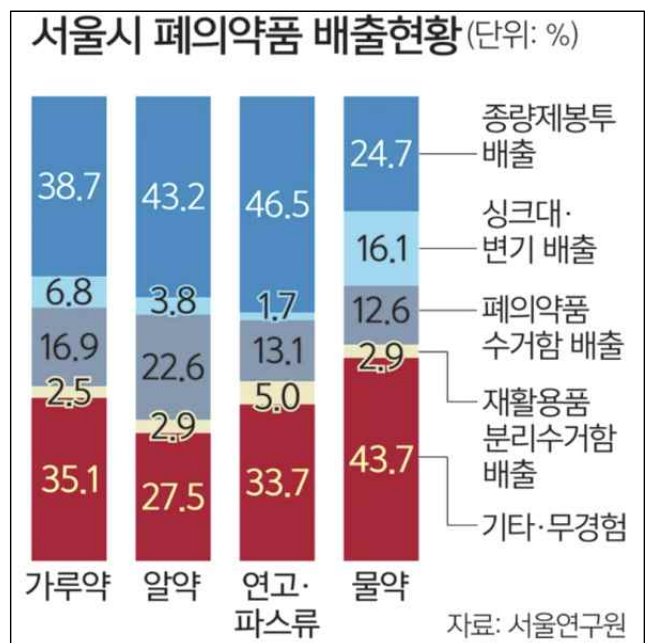
최근 언론에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하며, 이로 인해 환경 오염 및 약물 내성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의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자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2번인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그림자다.

나는 이 문제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의약품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인데, 왜 죽은 후에는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지만, 수거율은 여전히 낮고 시민 인지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서울의료원에 따르면 약 20% 이하만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시민 대부분이 이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동'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자 약을 버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알지 못하면, 문제의식도 없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정부의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 약국이 자율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하는 현실에서, 처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비용 부담도 불투명하다. 결국, 폐의약품은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곧 SDGs 12번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된다.

폐의약품은 단순한 고형 폐기물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화학성분과 생리 활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주의하게 자연으로 방출될 경우, 수생 생물의 호르몬 이상 유발, 토양 미생물 생태계 교란, 인간 건강 피해 등 복합적인 환경·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평소에 복용하는 약물에는 항생제, 호르몬제, 항우울제, 진통제 등 수



많은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하수 처리 과정에서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항생제의 남용과 무분별한 폐기로 인해, 하천과 바다에는 항생제 내성균이 퍼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보건 위협 중 하나인 '슈퍼박테리아'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여성호르몬 성분이 함유된 폐의약품이 하수로 흘러 들어가면, 물고기의 생식 기능이 이상해지고, 개체 수가 줄어드는 사례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폐의약품은 단지 쓰레기를 넘어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자연으로 유출된 약 성분이 정수 과정을 완전히 거치지 못한 채 다시 우리의 식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심코 변기에 버린 약이 수년 뒤 다시 우리의 컵 속 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약의 '끝'을 우리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의약품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들이 '그냥 쓰레기'로 전락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자원을 어떻게 소비하고 버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여기서 나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우리는 이 약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약을 어떻게 버릴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소비에 대한 윤리적 태도, 생산의 지속가능성, 환경과 보건 의 연결고리 등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가 강조하는 핵심 가치들과 깊이 맞닿아 있다. 우리가 약을 복용한 뒤 남기는 것은 단지 포장지와 약물 찌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꾸며 살아가는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태도의 반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시민 인식 개선

‘올바른 약 버리기’는 단순한 환경 캠페인이 아니다. 그것은 약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작지만 매우 강력한 행동이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통이나 변기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부분 정보 부족과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그렇기에 보다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약국과 보건소, 학교에서 폐의약품 처리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약물 포장지에 ‘환경오염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조치는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이 약은 환경에 유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국에 반납해 주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면, 폐기 단계에서의 행동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또한 약국과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하고,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의약품 올바른 폐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나 역시 약학 봉사동아리인 ‘약손’ 활동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에 앞장섰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폐의약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우드락 자료를 직접 만들어 대학교 곳곳에 전시하였다. 또한 직접 수거함을 만들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활동이 하나둘 모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제도적 기반 마련

현재 일부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대부분 자율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수거 이후의 처리 비용도 명확하지 않아, 일관된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 폐의약품 수거를 의무화하고, 수거 및 처리 비용을 공공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거율을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제약사도 생산자책임제도(EPR)에 따라 일정 비율의 회수율을 설정하고, 회수·처리 시스템 구축에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 이는 제품의 전 생애 주기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부과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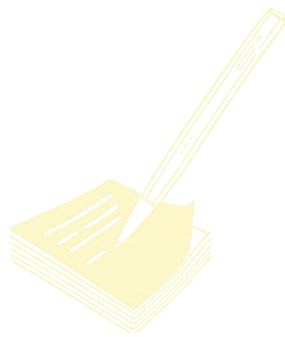
더 나아가, 디지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배출량, 회수율, 처리 과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QR코드를 통한 폐의약품 추적 시스템이 있다면, 시민이 반납한 폐 약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다.

셋째, 청년 세대의 참여

청소년과 대학생은 단순한 미래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며, 정보를 퍼뜨리는 중심축이다. 그렇기에 청년 세대의 창의적 참여가 절실하다. 예를 들어, SNS 챌린지, 웹툰, 숏폼 영상 등 젊은 세대의 언어로 폐의약품 문제를 풀어낸 콘텐츠는 높은 파급력을 가진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약 끝까지 챌린지’ 같은 캠페인을 확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엔이 제시한 SDGs는 17개의 거대한 목표처럼 보이지만, 그 출발점은 매우 작고 일상적이다. ‘먹고 남은 약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라는 선택은 작지만,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본질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이는 단지 환경부의 일이 아니라, 약을 복용하는 모든 개인, 생산하는 기업, 유통하는 정부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나는 폐의약품 처리 문제를 단지 ‘환경 쓰레기’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자원을 소비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회의 거울이다. 약은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또 다른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약의 마지막 여정을 책임질 때, 비로소 SDGs는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된다.





우수상

무너지는 미래성 다시 쌓을 수 있을까 - 예비교사의 고백

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이름 최시은

주제 기타(교육)

“교사의 역할이 사라진 학교에서 교육은 침묵하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누구나 한 번쯤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힘겹기도 했던 그 시절이 떠오를 것이다. 나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담임 선생님이 계셨다. 새 학기를 맞이할 때면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낯설고 두려웠던 나에게, 선생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걱정과 두려움에 붙잡히기보단 용기를 내보렴. 다들 네가 다가와 주길 기다릴 거야.” 그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친구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 이후에 만난 선생님께서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주시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던 과목의 도움이 역할을 맡기셔서 나에게 책임감을 키워주시기도 했다. 선생님들 덕분에 나는 소극적이고 겁이 많던 아이에서 조금씩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내가 받은 사랑과 관심, 도움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믿음직한 어른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교직 이수라는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뉴스를 보면서 이 길을 계속 걸어도 괜찮을지 자꾸만 자문하게 된다.

연이어 들려오는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소식,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비롯해 제주, 인천 등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들. 그들은 누군가의 담임이었고,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그들의 고통을 끝내 외면했다.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민원, 고소, 고립이었다. 교사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현실 속에서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는 살 아남을 수 없는 교실. 교사를 지켜줄 울타리는 다 부서진 채, 입을 꼭 닫고 말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린 학교 현장. 그 침묵의 대가가 결국 교육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예비 교사인 나에게 깊은 충격과 회의감을 안겨준다.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이 사건은, 한 명의 젊은 저연차의 교사가 반복된 민원과 압박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일이었다. 단지 아이들 사이에서의 작은 다툼에서 시작된 문제가 번져나가 몇몇 학부모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하게 되었고, 교사는 이를 감당하는데 지쳐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 서이초 사건은 결코 개인의 안타까운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저연차 교사에게 과도하게 쏟아지는 행정과 생활지도 업무,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고소, 고발, 그리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의 허술함이 복합적으로 얹힌 구조적 문제였다. 교사로서 할 일을 하다가, 교육의 기본을 지키려 하다가, 그 대가로 삶의 끝자락까지 몰려야 했던 현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사건 이후에도 교사들을 지킬 수 있는 단단 울타리를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 학부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기르기 위해 SNS에 검은 리본을 사진으로 올린 교사에게 항의를 하는 등 죽은 이를 기리는 것조차 지적받아야만 하는 현실에 그저 통탄할 뿐

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처벌은 흐지부지되었고, 유사한 사건은 반복됐다.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생활지도를 하던 중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끝내 자살로 불가 이번 연도 한 달 전인 5월에 생을 마감했다. 인천의 한 특수 교사는 업무 과중이 주원인이 되어 과중한 업무를 버티고 버티다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교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이 나라는 교사를 지킬 수 있는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나는 괴롭다. 한편으로는 고통받았을 선생님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수많은 원인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리고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이 길을 계속 걸어도 괜찮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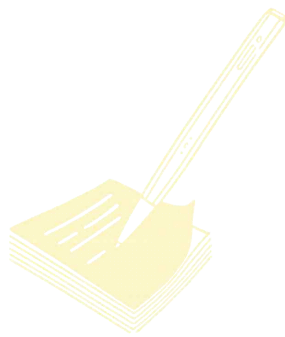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교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업은 물론이고, 행정 업무, 상담, 학부모 응대까지 모두 ‘당연한 책무’처럼 떠맡기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사를 보호해 줄 제도와 환경은 턱없이 부족하다. 학생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 역시 깊이 공감한다. 과거에서처럼 훈육을 목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체벌은 옳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교사의 인권과 권리 또한 함께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쪽의 권리만 강조되는 순간, 다른 한쪽은 점점 침묵하게 되고, 그 침묵은 곧 교육의 붕괴로 이어진다. 교권은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최소한의 권위이며,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책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교사가 말할 수 없고, 지도할 수 없는 교실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 그곳에서는 아이들도, 교육도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예비 교사인 나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단지 남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미래의 얼굴이며, 내가 마주할 수도 있는 교단의 모습이다. 가르치겠다는 다짐 하나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만 간다. 누군가는 말한다. “요즘 교사는 예전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지금 교사가 원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그것이 곧 교권이다. 학생이 길을 잃지 않도록 멈춰 세우는 말, 바르게 이끌기 위한 충고,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훈육과 생활지도. 교사의 말은 지배와 강압이 아니라 안내다. 그런데 그 안내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빌미가 된다면, 교사는 어떻게 교육을 이어갈 수 있을까.

나는 학창 시절, 선생님에게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고, 따끔한 꾸중이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 말들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의 나로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교사들은 그런 말조차 맘껏 하지 못한다. 말하려다 침묵하고, 설명하려다 외면당하고, 가르치려다 공격당한다. 교사의 침묵은 곧 교육의 침묵이고,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로 이어진다. 나는 조벽 교수님의 말을 떠올린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라.” 이 말은 나에게 교사의 본질이 ‘지식을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 배우도록 이끄는 사람’임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교사가 학생을 이끄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다. 디지털 시대의 민원은 더욱 무섭다. 한 학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하나가 여론을 형성하고, 단편적인 사실이 마치 전부인 양 퍼져나간다. 교사의 해명은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낙인과 의심만이 남는다. 그 와중에도 교사는 교단에 서야 하고, 아이들을 웃으며 맞아야 한다. 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인가.

그렇다고 나는 절망만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 교육부와 여러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직 수업에서 배우는 형식적인 학부모 응대 방식은 더 이상 소용없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린다. 이론 중심의 교육학 수업만으로는 교사를 지킬 수 없다. 이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민원 대응 시뮬레이션, 감정노동 관리 훈련, 법적·제도적 자기 보호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과의 소통만큼이나 학부모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 역시 교사의 핵심 역할이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교실 내 CCTV 설치를 통해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만을 허용하여 사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우리 역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을 제도화하고, 새로운 연락 중계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구조는 교사를 끊임없는 민원과 감시의 대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부모 역시 ‘내 아이만을 위한 고객’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기 초 학부모

연수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사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교육 담당자임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도 존중받아야 아이들도 존중받을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교사의 말이 회복되는 교실, 훈육과 소통이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현장, 이것이 진정한 배움의 시작점이다. “교육은 희망을 가르치는 일이다.” 하지만 교사가 희망을 잃은 교실에서는, 어떤 희망도 자라기 어렵다. 나는 예비 교사로서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이 글을 통해 내가 받은 교사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고 싶다. 무너진 모래성 위에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모래성이 만들어지길, 교육이 다시 교사의 말로 시작되기를, 그리고 그 말이 아이들의 미래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수상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학과 상담심리학과

이름 김나현

주제 사회적 불평등

사랑이라는 건 무엇일까. 내가 마음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일까, 좋은 것을 할 때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맛있는 걸 나누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일까. 사랑은 우리를 에워싸 그 틀 안에 가둬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가득 채우지만 때로는 눈물로 앞을 가리고, 누구보다도 괴롭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렇게 뜨겁고 복잡한 감정인 사랑은 왜 누군가는 축복받고, 누군가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감춰야 하는 고통이 되는 걸까. 우리의 모든 사랑이 똑같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나는 이 글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 서부터 배척당하는지, 그 '사랑의 경계'에 대해 말하고 싶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처음, 가장 강하게 가지면서도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일지도 모르겠다. 또 감정의 원천 또한 알지 못한다. 때론 다투고 상처를 주지만, 그럼에도 본능처럼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알기도 전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배운다. 다섯 살 아이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면 처음 보는 날에도 '이모, 사랑해요' 하고 편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이라는 우리가 가질 가장 깊은 감정에 대해 실감을 하기도 전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버릇처럼 해댄다. 사랑의 힘을 제대로 알기도 전부터 우리는 그 감정을 마음으로 이미 느끼는 걸지도 모른다.

우정과 사랑을 구분 짓는 사람들도 많지만, 결국 우정도 사랑으로 귀결된다. 친구가 기쁘면 나도 웃고, 친구가 다치면 내 마음도 덜컥 내려앉는다. 관계의 선을 더 명확히 긋는 요즘 세대 또한 진짜 친구에게는 그 선조차 허물만큼 사랑한다. 인간 대 인간, 즉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종족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마음 또한 존재한다. 당장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면 한인타운이나 아시안이 보이면 괜한 유대감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위험과 곤경에 처하면 도와주려고 한다. 같은 인종을 벗어나도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땐 다른 인종이더라도 짐을 대신 들어주거나 옮겨주는 호의를 보인다.

또 의사나 간호사, 상담사 같은 직업도 고작 사명감 같은 직업의식만 담긴 단어로만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사랑이지만, 구급차가 오가는 길에 모든 차량이 비켜주고, 도착한 이후에도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진심을 다해 진료를 보고, 혹여나 잘못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죄책감을 가지고 슬퍼하기도 한다.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넘쳐 동물과 식물로 흘러내리기도 한다. 동물과 식물처럼 연약한 존재에 대한 연민도 결국 사랑의 다른 얼굴이다. 이처럼 사랑은 특정한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 자체로 확장되고 흐른다. 우리는 다정한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어쩌면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발견하

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감정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에 따라 우리는 너무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 연인을 사랑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연인이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는 그것을 틀어막는다. 사랑은 똑같은데, 그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왜일까? 누군가는 그저 사람을 사랑했을 뿐인데, 사회는 그 감정에 죄의 옷을 입힌다.

노래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다. '가족이 돼주라, 내 집이 돼주라, 나도 날 줄 테니 너도 날 주라.' 사랑이라는 건 대체 뭐길래 나한테 가족이 되어주길, 집이 되어주길 바라고 서로의 존재도 서로 갖고 싶게 만들까.

최근에 한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는 동성애자였고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한 이후 부모가 욕을 퍼붓고, 아는 목사님께 들었으며 교정시설에 가면 나올 수 있다 했으며 끌고 가려 했다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한 후, 얼마 안 되어 자살 소식이 들려왔더라. 그가 한 일은 단지 누군가를 사랑했을 뿐이었다. 진심을 내보였다는 이유로 그는 가족에게, 사회에게 거부당했다. 그 사랑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병자라고 불렀다. 이성 간의 사랑은 고귀한 취급을 받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성애는 왜 병이라는 인식이 박힌 걸까. 우리는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반려동물이나 식물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유독 동성 간 사랑만은 문제 삼는다. 왜 어떤 사랑은 인정받고, 어떤 사랑은 교정받아야 하는가?

동성애는 병이 아니다. 억지로 배운 것도, 일시적 감정도 아니다. 사랑이라는 본질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감정일 뿐이다. 이성애는 축복받고, 동성애는 죄악시된다. 종종 그 근거는 성경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이 쓰이던 당시의 문맥은 지금과 다르다. 일부 신학자들은 바울이 비판한 것은 성적 지배와 착취의 관계였다고 말한다. 성인 간의 평등한 사랑은 죄가 아니며, 신이 금지한 것도 아니라는 해석도 점점 늘고 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더 이상 성적 지향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법적 인정이 없다. 생활동반자법조차 통과되지 않아, 서로 가장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다. 수술 동의서 한 장에 서명하지 못하고, 위급 상황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리 있어야 하는 상황.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실이다.

사랑을 했다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당하고, 정상적 삶을 설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개인의 사랑이 사회적 시선에 의해 위축되거나 금지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과연 사랑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사랑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자 권리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권리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기준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 법적 권리, 생존 조건과 연결되는 중대한 불평등이다.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병역 문제, 가족 관계, 의료 동의, 보험, 재산 상속 등 수많은 영역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누군가의 사랑이 단순히 인정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배제되고 있다는 뜻이다. 차별은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이 구조를 방치하는 사회는 결코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도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이 수년째 계류 중이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인종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이 법은 반복해서 외면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법의 보호 밖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단지 법률 조항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랑과 어떤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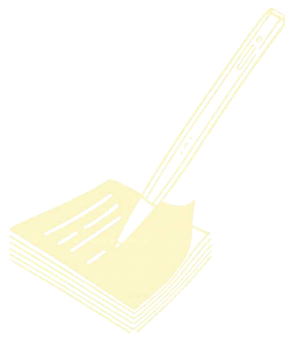
질문이며,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말한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또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은 내가 받을 사랑 중에 가장 크고 끝이 없다고 가르친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쓰여 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어주고, 옷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내어주고, 무엇이든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되찾으려 하지 말라.’ 이 가르침 또한 사랑이 가진 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어쩌다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집단이 되었을까. 같은 성경이라도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종교가 이토록 보수적인 태도로만 일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과학은 발전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며 살아가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가치들이 생겨나는 세상 속에서 종교만 멈춰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새로운 해석과 열린 시선을 통해 종교가 품어야 할 사랑의 진짜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사랑은 경직된 교리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며 확장되어야 한다.

사랑은 병이 아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억지로 만들거나 학습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며 스스로를 평등한 사회라 자부해왔다. 이제는 이 이중잣대를 버려야 한다.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랑은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단순한 포용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다. 우리는 모두 사랑할 권리가 있다. 사랑을 기준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어떤 사랑이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어떤 사랑이 틀렸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사랑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회는 정의롭지도, 평등하지도 않다. 모든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등을 말할 수 있다. 사랑은 차별 없는 연대이며,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지켜주는 일이다.



서울공화국의 블랙홀

학과 간호학과

이름 김수경

주제 사회적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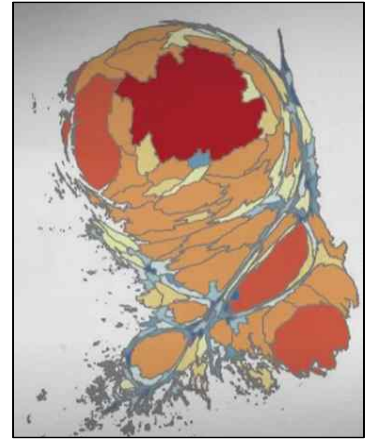
1. “서울만 커졌다.” 서울공화국의 현실

이 그림은 서울이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이른바 ‘서울공화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한민국 전역이 담긴 지도 위에서, 서울은 마치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른 채 존재감을 과시한다.

수많은 기회가 서울로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은 날로 심화하고 있고, 그만큼 지방은 점점 잊히고 있다. 이 작은 땅덩이에 모든 것이 집중된 모습은 우리 사회의 불균형을 여실히 드러내며, 미래 세대가 마주할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눈앞에서 버스를 놓쳐도 곧 또 오니까 괜찮아.” 서울 사람들에게 이 말은 그저 일상의 한 장면일 뿐이다. 병원을 급히 찾아야 해도 주변엔 수십 개가 준비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행복한 고민을 한다. 영화가 보고 싶으면 근처 상영관에 당일 예매를 하고 가면 그만이다. 밤이 되

어서도 서울은 잠들지 않는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환하게 빛나는 거리. 이곳이 바로 서울이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향하는 이유다. 마치 모든 삶의 편의와 기회가 서울에만 존재하는 듯하다. 사실 이 같은 서울 집중 현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1894년, 조선을 방문한 영국의 여성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도 기행문에서 당시 조선 사람들이 서울을 특별히 동경했다고 적었다. 시간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었지만 서울에 대한 사랑과 의존은 여전하다. 아니, 이제는 ‘서울공화국’이라는 풍자적 표현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사회가 되었다.



2. 10%의 땅에 50%가 산다: 서울공화국의 민낯

서울공화국이란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앞지른 이후, 그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약 5,135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601만 명으로 전체의 50.6%에 이른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10%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경제·문화·교육·의료·교통 등 대한민국 사회의 거의 모든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의 인구는 서울의 34%에 불과하고, 그 차이는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은 점점 삶의 편의성을 잃고 있고, 사람들은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서울로 떠난다. 이런 인구의 이동은 다시 서울에 수요를 집중시키고, 지방은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그 결과는 출산율, 부동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0.58명이다. 많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서울로 오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회사-집-회사’만 반복되는 고단한 삶이다. 높은 집값, 부족한 시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연애, 결혼, 출산은 먼 이야기로 밀려난다. 폭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서울 집값은 평균 10억원을 훌쩍훌쩍 넘어서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부동산 양극화는 계층 간 격차를 고착시키며, 수도권 외 지역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

서울 의료 공화국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에 위치한 5대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환자 중 지방 거주 환자가 차지하

코로나19 팬데믹은 서울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어떤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도 보여줬다. 가장 많은 의료 인프
 라를 자랑하는 강남과 송파에서도 감염 확산을 막지 못했다. 그만큼 밀집 자체가 감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위험이 ‘서울공화국’에는 내재돼 있는 것이다.

지방소멸 위험지역 전망

2017년

소멸 고위험
전남(4), 경북(6), 경남(2)

2047년

소멸위험 진입
서울(23), 부산(3), 광주(3), 인천(5), 대전(2)

※ 고령화율이 높고,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인구 감소세가 심한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자료: 통계청, 국토연구원

국토 균형발전, 즉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은 우리 헌법에서 세 차례나 명시될 만큼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헌법 제120조 제2항에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이제는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더 이상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2047년이면 우리나라 229개 기초지자체 전부가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익숙한 경고다.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이 사태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서울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서울공화국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역 지원이 아니라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을 동일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청년층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이 특정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고, 이와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의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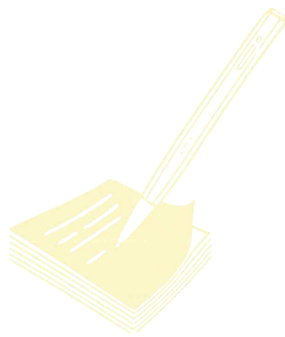
- 36 -

둔화되고 있다. 지역이 청년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단지 공공 일자리나 인프라를 넘어서, 공유 오피스, 창업 공간처럼 다양한 사람이 밀도 있게 모이고, 우연한 만남과 교류가 빈번히 일어나는 네트워크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소소하지만 연결과 교류를 이끌어내는 공간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거와 복지 측면에서도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 지방에 거주하는 가구에 세금 혜택을 제 공하거나,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및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수도권에 비해 불리하다는 인식을 줄여야 한다. 특히 원격 근무가 가능해진 만큼,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워크 환경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수도권으로 출퇴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무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KTX, GTX 등 교통망을 통해 물리적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이 같은 교통 및 공간 전략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들 간의 연계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인구 감소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국토 계획은 국토 교통부가, 산업 정책은 산업부와 중기부가 담당하지만, 부처 간 협력은 쉽지 않고 각자 보는 시각도 다르다. 행안부가 공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국토부가 인구 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이런 소통 부재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큰 장애물이다. 그래서 인구, 공간, 산업 문제를 한곳에서 통합 조정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 누구나 국가의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의료·교통 같은 기본 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

결국 ‘서울공화국’의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특히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간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다. 이제 국가 차원의 정교한 균형발전 전략과 공간 설계를 통해,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커지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착한 소비의 역설

- 우리는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을까?

학과 경영학과

이름 오연희

주제 ESG

‘착한 소비’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다. 누군가가 비건 화장품을 쓰고, 공정무역 마크가 찍힌 커피를 마시며, 친환경 포장재로 싸인 도시락을 자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의식 있는 사람’의 징표처럼 보인다. 요즘은 이런 소비 방식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처럼 자리 잡았다. SNS에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일상이 공유되고, 브랜드는 앞다투어 비건, 친환경, 공정무역 같은 키워드를 내세운다. 착한 소비는 단지 물건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수단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좋은 소비를 통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게 됐다. 나 역시 그런 소비를 하면서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단순히 개인의 자발적 선택만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환경, 인권, 동물복지 같은 문제들이 점점 더 대중의 관심 안으로 들어오고, 언론과 콘텐츠에서도 윤리적 소비를 이상적인 행위로 묘사하면서 사회 전체가 ‘착한 소비 해야 한다’는 일종의 도덕적 분위기를 만들어낸 면이 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착한 소비 = 좋은 사람’이라는 도식을 내면화하게 됐다. 그런데 요즘은 문득 이런 의문이 든다. 그 소비가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일까?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주변에서 ‘가치 소비’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 가격이나 브랜드보다 그 제품이 가진 ‘의미’를 보고 선택하자는 움직임이었다. 나도 처음에는 꽤 신선하고 멋있다고 생각했다. 공정무역으로 생산된 커피를 마시면 현지 농부의 삶이 나아질 것 같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을 쓰면 뭔가 윤리적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런 걸 SNS에 올릴 때마다, 나의 소비가 뭔가 작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서 은근히 뿌듯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소비가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윤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21년, 이니스프리는 ‘페이퍼 보틀’이라는 이름의 화장품 용기를 선보이며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해체해 SNS에 공개한 결과, 그 용기는 플라스틱 비율만 줄였을 뿐, 플라스틱병에 종이 라벨만 씌운 형태였다. 실상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마케팅을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부른다. 이 사건은 이후 그린워싱 논란의 대표 사례로 회자되며, 소비자들에게 걸만 그럴듯한 ‘윤리적 이미지’가 얼마나 쉽게 소비되는지를 보여줬다. 이런 사례는 기업의 윤리적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 패턴에 경고를 준다. 진짜 변화보다 ‘그럴듯한 포장’이 먼저 소비되는 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의도가 왜곡되기 쉽다. 착한 마음으로 한 소비가 기업의 마케팅 도구로만 쓰인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용당하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윤리적 소비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필요한 출발점이다. 문제는 그 소비가 감정적인 자기 위안으로 끝날 때다. 우리가 소비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수고와 성찰이 따르기 마련이다. 어떤 브랜드를 믿기 전에 진짜로 생산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인종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내가 이 물건을 ‘왜’ 사려고 하는지를 스스로 묻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구매를 멈추는 용기, 혹은 정보를 다시 들여다보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진짜 윤리적 소비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처럼 ESG나 비건, 친환경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소비되는 시대에는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종이 빨대가 실제로 플라스틱보다 분해도 어렵고 재활용 효율도 낮다는 지적처럼, 그럴듯한 변화는 오히려 진짜 문제를 가리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진심으로 환경을 고려한다면, 눈에 보이는 겉 포장보다 더 근본적인 생산과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 역시 그런 변화의 진정성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더 공부하고, 더 의심하고, 더 천천히 소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잘 알고 있다’는 확신보다는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라는 질문을 품는 태도다.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더 알아보려는 노력은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이 쌓일수록 우리의 소비는 더 단단해지고, 기업도 더 책임 있게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 윤리적 소비는 마치 천천히 자라는 씨앗 같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착한 소비를 진짜로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힘을 가지려면 ‘잘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는 윤리적이다’라는 착각은 너무 달콤하고 쉬운 감정이다. 그러나 진짜 윤리는 불편하고 복잡하다. ‘이 제품은 왜 이렇게 싸지?’, ‘이 인증 마크는 어떤 기준일까?’, ‘이 브랜드가 말하는 착함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걸까?’

이런 식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때로 귀찮고, 불편하고, 나의 믿음을 흔든다. 그런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착한 소비는 그렇게 조금 더 깊은 생각 위에서 시작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착한 브랜드도, 친환경 포장도, 멋진 인증 마크도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쉽게 믿지 않는 태도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힘이다.

“내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건 뭘까?”, “이 소비가 정말 변화를 만들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멈추지 않을 때, 착한 소비는 ‘척’이 아니라 진짜 변화를 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질문들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변화를 향한 걸음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진짜 성찰의 시작이며, 세상을 바꾸는 작은 첫걸음이다. 결국 착한 소비는 쉽고 가벼운 ‘척’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

키오스크 앞에서 흘린 눈물 : 60-70대 디지털 격차의 현실

학과 상담심리학과

이름 이연정

주제 디지털 리터러시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한 노인이 키오스크 앞에 선 채 눈물을 흘렸다. “내가 직접 햄버거를 사 먹기에는 너무 늙은 걸까?”라는 그의 한탄은 디지털 기술의 벽 앞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보여준다. 터치스크린으로 대체된 무인 주문대 앞에서 당황해하는 이 장면은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현실에서 60~70대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 앱이나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본 글에서는 60~70대 세대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데 겪는 문제와 그 구조적 배경을 짚어볼 것이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지원 노력과 그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후 세대 간 공감과 창의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길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익숙함에서 멀어져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 예컨대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응답자 중 절반도 안 되는 45.8%만이 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13.8%만이 키오스크를 사용해 봤을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디지털 기기 이용률은 급격히 낮아진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중장년층은 “사용 방법을 몰라서”, “굳이 사용할 필요를 못 느껴서”, “잘 못 다뤄 남에게 폐를 끼칠까 봐” 등이라고 답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불안, 남에게 피해를 줄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한 노인이 키오스크에 서툴러 주문이 오래 걸리자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리며 실랑이가 벌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고령층에게 디지털 기기에 대한 위축감과 공포증을 심어줄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디지털 접근성의 부족이다. 고령층은 작은 글씨나 복잡한 UI를 읽고 조작하는 데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 젊은 세대에겐 익숙한 약어와 신조어, 추상적인 아이콘 등은 고령 사용자들에게 하나의 장벽이 된다. 기술 디자인 측면에서 이러한 노인 친화적 설계가 부족한 것은 실제 사용에 어려움을 심화시킨다. 아울러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르신들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지적처럼 가족이나 주변에 즉시 질문할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노부부의 경우 이 부분에 매우 취약하다. 젊은 세대에겐 사소해 보이는 문제도 곁에 물어볼 사람이 없는 고령층에겐 넘기 힘든 산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60~70대가 젊은 세대보다 디지털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그들 세대가 처했던 특수한 사회 교육적 배경이 존재한다. 먼저, 이들은 학교 교육이나 직장 생활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IT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현재 60~70대는 청소년기를 인터넷과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이전인 아날로그 환경에서 보냈던 것이다. 이는 현세대의 고령층이 디지털 문해력 측면에서 출발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매우 빨라 세대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 보급,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장으로 기술 변화가 지난 시간 동안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 세대가 겨우 PC 사용에 익숙해졌다 싶으면 곧 새로운 기기와 플랫폼이 등장하는 식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평생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중장년층은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지기 쉬웠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으로 일상생활 전반이 급격히 디지털화되면서 준비되지 않았던 고령층은 더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교육 기회 부족도 문제다. 젊은 층은 학교에서 컴퓨터 활용을 배우고 사회 진출 후에도 자연스럽게 IT 환경에 노출되지만 현 60~70대가 청소년이던 시절에는 이러한 교육 인프라가 없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정부와 기관들의 디지털 교육은 주로 직접 신청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정작 학습이 시급한 이들은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배움의 소외 상태로 남은 고령층이 많다. 따라서 지금의 격차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세대를 둘러싼 교육 불균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부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시행해 왔다. 전국 1,000여 개의 교육장을 기반으로 누구나 무료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287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이 교육을 수강했는데, 특히 그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층의 참여 비중이 높았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 버스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시설을 교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2년 디지털 문해력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어르신 대상 1:1 키오스크 사용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키오스크 화면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여 연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무인 단말기가 설치된 장소에 디지털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 즉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자체 차원의 시도들은 고령층의 실생활 어려움을 줄이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례이다. 민간 기업들 역시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통신사들은 시니어 전용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하고 IT 기업들은 고령층 맞춤 서비스나 앱을 개발하며 금융권에서도 고령 고객을 위한 디지털 기기 사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 ICT 기업은 ‘시니어 디지털 스쿨’프로그램을 통해 카카오톡 사용법부터 유튜브 활용법까지 노인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 영역에서는 대학생 봉사단이 지역 복지관에 파견되어 스마트폰 기초를 일대일로 가르치는 등 세대 연결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은 고령층이 디지털 낙오자로 남지 않도록 사회가 돕고자 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교육의 실효성 측면에서 일회성 강좌나 단기 캠페인만으로는 고령층의 습관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실제 디지털 배

움터 등에서 교육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교육을 찾지 않는 상당수 노인들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술을 익히는 것 자체보다 배우려 가서는 것이 더 큰 허들인 노인들이 많기에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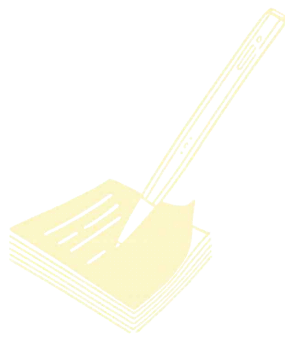
정부 정책의 지속성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는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어 상당수 교육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의 예산 역시 크게 줄어 이러한 예산 삭감이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겉으로는 디지털 포용을 외치면서 정작 예산을 반토막 낸 정책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의지 부족을 넘어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역행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민간 주도의 노력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기업의 스마트폰 교실이나 봉사 활동은 주로 도시 위주로 이루어져 농어촌 지역까지 고르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 또한 일부 노인들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모르는 것을 쉽게 묻지 못하는 문화적 요인도 있어 심리 장벽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기도 한다. 기술 자체의 한계 역시 존재하는데 초기 설계부터 고령층 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사용자 친화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현재의 디지털 포용 정책이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서비스 디자인 전반의 개편까지 포괄해야 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선택지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정부와 기업이 필수 서비스에 대해 오프라인 대체 수단을 반드시 병행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노인이 배우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멘토-멘티 형식의 상호 교류로 서로를 이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청년 봉사자를 한 명씩 어르신과 짝지어 디지털 친구를 맺고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함께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1:1 맞춤형 교육의 효과가 크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심리적 두려움을 줄여주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손주에게 휴대폰을 배우며 손주와 대화가 늘고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있었다고 한다.

디지털 기기의 디자인 혁신도 중요하다. 처음부터 고령층과 장애인도 쓰기 쉽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포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화면 글자의 크기 조절, 음성 안내 기능, 단순한 메뉴 구성 등 모든 연령층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공공정보나 필수 행정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 경로를 모두 지원하여 원하면 기존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세대의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과 인내이다. 디지털 세계에 먼저 녹아든 세대가 뒤에 온 세대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사회, 배우는 이를 끝까지 응원해 주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끝까지 가는 일이다. 60~70대 부모님 세대가 디지털 세상에 편하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세대 간 디지털 격차라는 벽도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약자의 질병은 개인 책임인가, 사회의 구조적 방치인가?

학과 약학과

이름 최가영

주제 사회적 불평등

“이 약을 계속 사기엔 생활비가 부족해요.”

만성질환으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한 환자의 말이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치료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건강이 개인의 책임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실제로 약값은 많은 이들에게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약자들에게 질병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닌 생존의 위기로 다가온다.

대표적인 예가 당뇨병 치료제인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다. 주 1회 투여로 복약 편의성이 높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도 입증되어 널리 권장되지만, 고가의 약가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저가의 구형 치료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본인 부담금은 존재하고, 실손보험 등 추가 보장이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가의약품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약가는 곧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스핀라자(누시너센)’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를 위한 대표적인 치료제인데, 1회 투여 비용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일부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적용 시점이나 연령, 질환 단계 등에 따라 실질적인 접근성은 크게 달라진다.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유전자 치료제는 수억 원에 이르며,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경제적 여건에 따라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일정 수준까지 고가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명확하다. 먼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약가 협상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중심이 되어, 시장성이 부족하거나 환자 수가 적은 치료제는 등재가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급여 등재 이후에도 본인부담률이 높아 실질적 비용 부담이 낮은 소득계층에게는 여전히 접근 장벽으로 작용한다. 희귀의약품의 경우에는 공급이 대부분 수입 의존적이어서 유통 불안정성까지 겹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약값이 단순한 상품 가격이 아니라, 곧 생존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회적 변수임을 보여준다. 약가 제도는 의료 형평성의 핵심 축이며, 경제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약가 정책은 여전히 제약 산업의 이익과 건강보험 재정의 논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사회는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장 논리에 맡겨둔 채, 약자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절실하다. 첫째, 희귀질환 및 중증 질환에 대한 고가의약품의 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적 재정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NHS는 ‘고가 약 접근 프로그램(HATP)’을 운영하며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급여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고가 약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정부 재정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의약품 바우처 제도’와 같은 직접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일반 의료비 지원은 존재하지만, 약제비에 특화된 지원 제도는 미비하다. 특히 만성질환자와 희귀질환자에게는 장기적인 약물치료가 필수이므로, 본인부담금의 지속적인 누적은 복약 순응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급여제도의 확대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하 소득자의 약제비를 지원하는 별도의 약국 기반 감면제도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고가 약의 급여 등재 시 진행되는 경제성 평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는 제약사의 가격 제안과 치료 효과에 대한 경제성만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시장성과 환자 수가 적은 약물은 등재에서 탈락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가치 평가(Social Value Assessment) 요소를 도입해 희귀질환자의 생존 가능성, 삶의 질 향상, 돌봄 부담 완화 등을 정성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 단체와 보건 의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의약품 급여 결정이 보다 투명하고 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약사의 역할 강화도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 약사는 단순한 조제나 복약 지도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조율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약사는 고가의약품 복용 환자에게 복약 지속을 위한 상담과 대체 약 안내, 제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사회 약국은 의료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가장 가까운 의료 접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장애인·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복약 모니터링, 약물 관리 서비스, 약제비 부담 완화 방안 안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약사가 지역 사회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실천이며, 그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약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우리가 ‘모두의 건강’을 말하려면, 그 출발점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데 있다. 질병이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한 현실 속에서, “경제적 약자의 질병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은 다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갯생과 번아웃 사이, 휴식이란 이름의 자기착취

학과 **약학과**

이름 **송화윤**

주제 **기타(자기개발)**

한국에서 휴식이란 무엇일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무언가를 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쉬는 시간에도 소위 말하는 갯생을 살기 위해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자기 계발에 매달린다. 직장인 8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직장인의 75.2%가 퇴근 후 자기 계발을 한다고 답했다. 대다수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에도 휴식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휴식은 단어 의미 그대로 쉰다기보다는, 갯생과 번아웃 사이 어딘가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생산성 있는 무언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쉬는 것을 불안해하는 지금, 이런 휴식을 휴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휴식을 다음 성취를 얻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만 보고 있다. 사회가 휴식을 재정비를 위한 멈춤으로 보지 못하고, 게으름으로만 판단하고 있음은 대학생들의 휴학만 봐도 알 수 있다. 휴학을 택한 대학생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거나 온전히 쉬에만 집중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자격증 취득, 어학 학원 수강, 아르바이트, 인턴 체험 등으로 최대한 휴학 기간을 알차게 꽉 채우려 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취업 면접 때 휴학 기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겪어봐야 하는 대학생 때조차, 휴학 사유가 단순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휴학 기간을 성과와 그 과정으로 채워놓아야 하는 것이다.

1분 1초를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 하루가 끝날 때쯤 탈진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나서야 하루를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제야 갯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갯생 살기는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로 인한 과로조차 자기 관리라는 이름으로 모른 척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더 오래 달리기 위해 오히려 쉬는 기간이 필요하다. 사실 기계조차 쉬 없이 돌리면 빨리 고장이 난다. 갯생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자투리 시간을 쥐어짜 내 또 다른 활동에 투자하는 그 행동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탈진으로 이어져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끝맺을지 장담할 수 없다. 후자가 되었을 때 이미 지친 몸과 정신을 되돌리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유발 피로 환자(SED) 107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했을 때 번아웃, 불안, 우울증 증상은 재할 완료 후 관찰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SED를 앓았던 환자 중 상당수가 재할 후 10년이 지나도 건강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당장 잠시간의 갯생을 살기 위해 휴식을 포기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사회적으로는 멈춤을 그저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재정비 시간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봐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인이 타인의 시선에 눈치를 특히 많이 보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휴식다운 휴식을 마음껏 취하려면, 삶은 길고 잠시 멈추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부터 사회적으로 단단히 자리 잡아야 한다. 멈춤이 실패나 결함이나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기틀이 잡힐 것이다.

제도를 시행해 아예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주 6일제 근무에서 주 5일제 근무로 바뀔 때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주 5일제 근무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킨 사례가 이미 있다. 따라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는 한국인을 위한 또 다른 휴식 제도도 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 2주 이상 연속 휴가를 권장하는 핀란드나, 주 35시간 근무제로 초과근무가 없는 프랑스처럼, 휴식을 장려하는 문화와 제도로 휴식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점차 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어린 나이부터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것도 진정한 휴식을 수용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더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쓰지는 배우지만, 어떻게 쉬는지나 왜 쉬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뇌가 외부 자극에 집중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들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 네트워크는 뇌가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휴식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학생 때부터 배우는 것이 휴식에 대한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디지털과 잠시 거리를 두는 방법이 있다. 누군가의 휴학 브이로그나 퇴근 후 갓생 브이로그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저렇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휴식 시간마저 디지털 속 보이는 남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는다면 좋겠지만, 오늘날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디지털 세상에서 이를 조절하기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개인으로서 이제 자신의 '휴식'을 돌아봐야 할 때이기도 하다. 그저 바쁘게 사는 것과 잘 살아가는 것은 분명 다르다. 휴식이라고 이름 붙인 시간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시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하는 게 아니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시간이라고 스스로 너그럽게 휴식을 허락해야 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 휴식조차 밀도 있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 당신은 갓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착취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으로부터, 당신의 휴식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숨 쉬는 지구를 위한 약속

: ESG 경영과 탄소 저감의 창의적 도전

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이름 서지성

주제 ESG

21세기 인류는 기후 위기라는 역사상 가장 중대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평균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와 같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다. 그 영향력은 삶의 모든 영역에 녹아들어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단순히 이윤 창출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윤리적 주체로 거듭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ESG 경영(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은 새로운 시대 가치관으로 부상한다.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많이 팔았는가?'에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로 옮겨가는 지금, ESG는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닌 가치 중심의 생존 철학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특히, ESG의 'E', 즉 환경(Environment)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탄소 배출과 이에 따른 기후 변화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논할 때, 종종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바로 농축 산업에서 발생하는 숨은 탄소 배출원이다.

이 글에서는 일반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반추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감축 문제, 둘째, 탄수화물 기반 농업과 식품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의 절감 방안이다. 이 두 가지는 단지 기술적인 해결의 대상이 아닌, ESG 경영의 창의성과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숨은 온실가스의 주범, 반추동물의 메탄가스

우리가 좋아하고 매일 소비하는 소고기, 우유, 양고기 등은 모두 반추동물에서 비롯된다. 이 반추동물들은 독특한 소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개의 위에서 다양한 미생물들이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이러한 메탄가스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강력한 온실효과를 일으키며, 지구 온난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 농업 관련 메탄가스의 약 40%가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14%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중은 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장의 굴뚝 연기'나 '자동차 매연'만이 문제라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ESG 경영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기업이 사회적 무지와 정보의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대중들에게 알리고, 보다 정교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탄 생성을 줄이기 위한 예시로 호주에서는 CSIRO가 한 종류의 붉은 해조류인 *Asparagopsis taxiformis*를 반추동물의 사료에 첨가하면 메탄 배출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실제로 호주의 한 낙농 기업은 이 사료를 적용해 젖소 한 마리가 내뿜는 연간 메탄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이는 사료 구성만 바꾸는 간단한 변화로도 기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스타트업 "Blue Ocean Barns"는 장내 미생물에 작용하는 천연 성분을 개발하여 메탄 생성을 억제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의 소화 효율을 높여 생산성까지 개선시켜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는 ESG가 단지 '착한 경영'을 넘어서 경쟁력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식품과 작물 속 보이지 않는 탄소를 줄이다

탄소 배출은 공장이나 자동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 밀, 옥수수 등 탄수화물 기반 식품의 생산과 가공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한다. 특히 벼는 물속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혐기성 세균이 활발히 작용하며 메탄가스를 다량 배출시킨다. 세계 쌀 재배 면적의 대부분이 벼를 물속에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작물 생산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생산 방식의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도와 베트남은 벼 재배 방식에서 간헐적 관개 방식을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방식은 논을 지속해서 물에 잠기게 하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물을 말려 메탄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베트남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메탄 배출을 최대 50%까지 줄이면서도 쌀 수확량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면서도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저탄소 벼 품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정밀 농업’ 기술을 활용하여 물과 비료의 양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곳에만 투입하는 방식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ESG 경영의 중요한 지점은 이러한 기술들이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기술을 넘어선 책임과 상상력

ESG는 기술이나 수치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자, 기업이 미래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반추동물의 트림이나 논에서 피어오르는 메탄은 평소에는 관심받지 못하는 주제였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가장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ESG 실천의 예가 될 것이다.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기 소비를 줄이는 ‘플렉시테리언’ 식생활을 유도하고,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확대하며, 이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ESG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다. 기업은 이런 움직임을 통해 소비자와 함께 ESG를 실천하는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변화의 흐름 속 ESG의 전략적 진화

앞으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특히 탄소 저감 분야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투자 유치와 브랜드 가치 제고의 핵심 척도로 작용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처럼 국제 사회는 이미 탄소 배출을 기업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기관과 소비자 역시 ‘친환경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반추동물 메탄 저감 기술이나 저탄소 농업 방식은 단지 농업계의 혁신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기술과 경영, 소비자의 가치 선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장 질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SG 경영은 곧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창의성과 기술이 결합된 ‘녹색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탄소 저감은 단지 환경 보호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기업이 세상과 소통하는 책임의 언어이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윤리적 선택이다. 반추동물의 사료 개선이나 쌀 재배 방식의 변화처럼 작고 창의적인 노력들이 모일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꿈에 가까워질 수 있다.

ESG 경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가 기업에 요구하는 새로운 ‘표준’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창의적인 약속이다. 기업이 그 약속을 실천할 때, 우리는 모두 숨 쉴 수 있는 지구에서 더 오래,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피 묻은 음식을 계속 소비하게 되는가?

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이름 전현선

주제 ESG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거다” 탄핵시국 당시 김장하 선생의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데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 요 몇 년 사이에 전세사기, 성범죄, 데이트 폭력, 묻지마 폭행, 주기 조작,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것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으며, 삶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악질적인 사건들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치밀하게 평범한 시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평범한 시민들을 압박하는 사건 중 하나인 “SPC 여성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 보려고 한다.

SPC 노동자의 사망은 22년도부터 매 해 한번씩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2년 10월 경기도 평택 SPL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재료 혼합 기계에 끼여 사망, 23년 8월 성남 사니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제빵 기계에 끼여 사망, 25년 5월 시흥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테이너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여 사망. 불과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희생이 반복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아직 이 사건에 무뎌져야 하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자와 방송국이 유가족과 현직노동자들을 취재했는데, 그 때마다 들리는 소리도 똑같았다. “안전을 위해 덮개가 있지만, 정해진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덮개를 덮고 열 시간조차 없다”, “생산속도를 낮추지 말라는 기업의 압박에 안전을 신경 쓸 수 없다.” “야간근무도 선택이 아닌 강요가 있었다” 와 같은 말들이었다. 실제 공장에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비상정지버튼, 접근 방지 커버, 자동 윤활시스템이 있었지만 기업에서는 비용의 절감을 위해 도입하지 않았다. 노동법에 의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지라도 안전장치를 쓸 여유조차 없었다는 현직 노동자의 말을 고려하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매 해 같은 원인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났지만, 기업의 입장은 언제나 더 조심하고 유념하고 주의하겠다는 말이 전부였다. 국가의 반응과 처벌은 어땠는가? 2022년 때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6억 3500만원과 함께 당시 공장책임자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3년간 1000억원의 규모로 안전경영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다음 년도에 또 같은 원인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2023년 사망사고는 검찰 송치가 지연돼 아직까지 법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국가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올해 사망사고가 또 발생해 노동부와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고 발생 전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 받는 처벌은 대부분 벌금이나 시정 조치가 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처벌의 강도가 낮다. 실제 22년도에 보도된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SPL 사망 사건에서 기계 덮개를 고정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원청 경영진은 처벌을 피하고, 하청업체 관리자급 실무자가 대신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례도 존재한다. 결국 기업의 의지만 있으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처벌을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어떨까? OECD 국가 평균이 1만 명당 0.8~1.0명인데, 우리나라는 0.5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단순히 감독관 숫자가 적은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사용된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 배치되는 평균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10만 명당 0.2명으로, 수도권에 배치되는 산업안전감독관 수인 10만 명당 0.6명을 고려하면 지역 간 격차가 3배에 달한다. 이런 지역 격차는 감독관 업무의 질도 떨어뜨린다. 사고가 일어나도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많은 양의 업무 때문에 사건에 집중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사고 예방이 아닌 사고 이후 수습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법들과 현저히 적은 감독관 수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가 단순히 기업의 윤리 결여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 주고 있다. 결국 기업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할 법과 제도, 정부와 기관의 '방치'가 구조적으로 이 죽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희망적이게도, 최근 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법적 장치의 보완과 감독 인력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한계와 현장 기업들의 현실적인 압박은 여전히 존재한다.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현장의 노동자들은 정부 의지와 실제 변화 사이에 여전히 큰 간극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진전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과 실질적인 감시 및 집행 강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작자는 22년도에 기업이 했던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잊을 수가 없다. 22년도 평택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20대 여성 장례식장에는 SPC 브랜드인 파리바게트에서 가장 단가가 싼 단팥빵이 가득 담긴 박스가 보내졌다. SPC에서 장례식장의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보낸 것이었다.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부품으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당시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유가족은 “이 공장에서 빵을 만들다 숨졌는데 어떻게 그 곳에서 만들어진 빵을 답례품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냐며, 기업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SPC가 장례식장에서 사과는 커녕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기업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당시 온라인에서는 SPC의 브랜드들이 담겨있는 사진이 퍼지고, SNS에서 #피문은빵이라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며 꽤 큰 규모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실제 그 당시 브랜드 타임즈와 동양일보 보도에 따르면, SPC그룹 전체 매출은 작년대비 3%하락했고, 주가도 4%넘게 하락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사망한 사건이었다. 추가로 부상과 산재처리건도 말해볼까 한다. SPC의 부상과 산재처리건은 다른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2022년 문화일보 기사는 2017년부터 5년간 근로 중 다친 인원이 무려 758명으로 제조업 평균에 비해 1.4배에 달하는 숫자라고 보도했고, 2025년 경향신문기사에 따르면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SPC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사망3건, 부상5건이다. 기사에 나와있는 통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SPC에서 발생하는 부상과 산업재해는 단순히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지속적이고 구조적문제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작자는 SPC공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여러 기사와 뉴스를 찾아보았지만, 직접적으로 보도된 사례는 드물었다. 하지만 방송에 의해 알려진 사건과 노동건강연대가 한 인터뷰는 있었다. 22년 10월에 샤니 공장에서 박스 검수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된 사건이 발생했고(뉴스1보도), 25년도 1월에도 평택 SPL공장에서 기계를 청소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손가락 중지와 약지가 절단되

는 사건이 발생했다(한겨레 신문 보도). 이런 부상 사건이 보도된 이후 노동건강연대는 한국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법의 허점과 기업의 노동자 안전보호 미흡함을 토로했다.

작자는 부상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아닌 이상 노동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현실 또한 노동자를 소외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다.

막강한 기업과 미약한 법이 노동자의 부당함을 가리는 상황에서 잘못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소비자의 행동과 목소리 뿐이다. 그렇다면 평범한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행동은 무엇일까? 바로 소비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완벽한 불매를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왜일까?

이미 SPC라는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은 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0개의 브랜드가 있고, 국내 6500개의 매장이 있다. 만들어 파는 음식도 우유, 빵, 아이스크림, 샐러드, 요거트 등 다양하다. 게다가 음식만 만들어 파는 것도 아니다. 유통을 통해 납품을 하기도 한다. 2025년에 보도된 SBS기사에 따르면 맥도날드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 프랜차이즈 매장이 SPC삼립에서 햄버거용 빵을 공급받아 만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빵 유통 구조에서 SPC는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빵의 유통 허브”라고 불릴 정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 묻은 음식’을 안 먹겠다고 결심하면서도, 또 다시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음식을 소비하게 된다. 선택권은 있지만 회피권은 없는 구조 속에서, 완전한 불매는 쉽지 않다. 설령 그런 것까지 모두 의식하여 불매를 통해 기업에게 타격을 준다고 해도, 기업입장에서는 해외 시장을 노리면 그만인 셈이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고 의도한 만큼의 타격을 받지 않는 구조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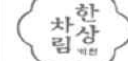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의 불매를 하는 것은 꽤 가치 있는 일이다. 불매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업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매라는 행위를 할 때마다 해당 기업에 의해 희생된 노동자들과 기업의 추악한 행태들을 떠올릴 수 있다. 동시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생명을 소모하는 결과를 낳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고, 이런 메시지들은 쌓이고 쌓여 결국 사회의 인식과 분위기를 바꾼다.

그래서 불매를 하는 것은 단순히 소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연대이자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감시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행동가가 될 수 있다. 완전한 불매는 불가능할지라도, 윤리를 외치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모이면 기업도, 사회도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아닌 예방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은 ‘피 묻은 음식’의 진실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다.

끝으로 22년도부터 만들어져 온라인과 SNS상에 돌아다니는 SPC 브랜드 모음 사진을 첨부한다. 앞에서 말했듯, 이 사진은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익숙한 브랜드들 뒤에 숨겨진 노동자의 희생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며, 노동자에 대한 애도이자 이런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다짐이자 표현이 될 것이다.

| SPC 계열사 및 브랜드 목록 |

	식 품			원 료		IT / 서비스	유통	
계 열 사			비알코리아(주)					
	SPC 삼립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SPL	SPC PACK	세کت아인	SPC GFS	타이거 인터내셔널
베이커리 / 디저트 브랜드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베스킨라빈스	던킨	삼립	사니	빛은	패션5
외식 / 다이닝 브랜드								
								
	에이크웍	에그슬럿	라그릴리아	피그인더가든	시티델리	퀸즈파크	베라	
								
	라틀리에	그릭슈바인	스트릿	디.퀸즈	리나스	한상차림		
커피 / 음료 브랜드					유통 / 서비스 브랜드			
								
	파스쿠찌	잠바주스	커피웍스	티트라	해피포인트	더월드바인		

시작은 치유, 끝은 책임

- 폐의약품으로 바라보는 SDGs

학과 약학과

이름 최현우

주제 SDG's

약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다. 그러나 그 효능이 끝났을 때, 그 약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약은 생명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 2006년 영화 <괴물>은 한강에 무단 방류된 화학 약품이 괴물로 되돌아와 인간을 위협한다는 설정으로, 환경오염의 책임이 결국 사회 전체로 돌아온다는 경고를 던졌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폐의약품 문제와도 닮아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리는 환경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다양한 악영향을 낳는다. 약물 성분은 정화되지 않은 채 하수도를 타고 강으로 유입되고, 수질을 오염시킨다. 특히 항생제나 호르몬제가 포함된 약물의 경우, 수생 생물에게 축적되어 생태계를 교란하며, 인간에게는 항생제 내성과 같은 위협으로 돌아온다. 시민 인식의 부족, 제도적 허점, 약물 전문가의 소극적 태도까지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다뤄야 할 공공의 과제로 여겨져야 한다.

이는 UN이 제시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2번 목표인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SDGs 12번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유해 물질의 환경 유입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체계를 구축하자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폐의약품 처리 실태는 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 다수는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약국에 설치된 수거함도 접근성이 낮고 운영 기준도 제각각이다. 그 결과 약은 무관심 속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사회는 그 후폭풍을 감당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인식 개선이나 수거함 설치 같은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서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수거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폐의약품 수거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하고 약국에 방문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일정량 이상을 반납하면 지역 마일리지나 건강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으며, 앱에는 유통기한 알림, 위치 기반 수거함 안내, 약물 정보 제공 기능까지 통합할 수 있다. 즉, 폐의약품 문제를 '기억'에 의존해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관리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시민 참여 유도는 이미 다른 공공 서비스에서 입증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앱 도입 이후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며 이용률이 급증했다. 실제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따릉이의 대여 건수는 1,414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3% 증가했다. 이는 기술이 시민의 실천을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공익 광고 캠페인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시민 인식을 환기시키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예컨대 "하수구에 버린 약 한 알이 물고기의 간에 남습니다" 같은 문구를 시각화한 15초 영상은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환경부의 플라스틱 줄이기 챌린지나 건강보험공단의 '건강

습관 숏폼'처럼, 폐의약품 문제도 디지털 콘텐츠로 사회적 반향을 이끌 수 있다. 약대생들이 직접 캠페인을 제작하면 전문성과 신뢰성도 함께 높아진다.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해결책의 중심에는 결국 약사의 역할이 있다. 약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이지만, 그 효능이 다한 뒤에는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또 하나의 물질이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존재는 바로 약물 전문가인 약사다. 약이 '처방되고 조제되는 순간'뿐 아니라 '폐기되는 순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윤리적 인식이 약사 전문성의 범위 안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나 역시 약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폐의약품 문제를 결코 방관할 수 없다고 느껴왔다. 작년, 내가 속한 약학과 봉사 동아리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한 바 있다. 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수거 장소를 안내하고, 직접 대학과 협력해 약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버릴 곳을 몰라서 그냥 보관해두었다”며 약봉지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 문제의 본질은 시민의 무지가 아니라, 안내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작은 캠페인이었지만, 그날 수거된 폐의약품의 양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반응은 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내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남겼다.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은 거창한 국제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어떤 방식으로 약을 사용하고, 남기고, 버리는지를 고민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약의 시작과 끝,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윤리적 약사로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그 출발은 우리가 지금껏 외면해 온 '약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바라보고,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믿는다.

이동의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나라에서

학과 영어영문학과

이름 홍태경

주제 사회적 불평등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왜 반복되는가.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아침 출근길. 열차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하자 방송이 울린다.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모인 시민들은 불만에 찬 표정으로 중얼거린다. “왜 또 지하철을 막아?”, “그 사람들 때문에 회사 지각하겠네.”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어느덧 시민들에게 익숙한 ‘불편함’이 되었고, 때로는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그 시위가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시위의 배경과 맥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우리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그동안 묵살되어 왔고, 법과 제도가 있어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던 이동권 문제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다. 시위에 대한 비난은 “왜 피해를 주느냐”에 집중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이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는가”다. 이 질문을 외면한 채 시위의 방식만을 문제 삼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무관심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많은 지하철역에는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부족하거나,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고장이 잦고, 이를 보조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휠체어 승하차를 지원하는 운행 시스템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수많은 시간과 절차, 주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동의 자유는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끊임없는 장애물과의 싸움이다. 지하철 시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하필 출근 시간에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사회에 피해를 주는 존재’로 바라보는 편견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동안 장애인 단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권 문제를 알리려 노력해왔다. 기자회견, 정책 질의, SNS 캠페인 등 여러 경로를 시도했지만 큰 사회적 반향은 없었다. 반복된 침묵 끝에 선택한 방식이 바로 출근길 시위다. 출근 시간의 지하철은 시민 일상의 한복판이다. 누군가의 일상이 멈추면, 사회는 비로소 그 문제에 주목하게 된다. 지하철 시위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을 통해 보이지 않던 존재와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인 것이다.

비장애인들은 시위로 인해 몇 분 혹은 몇십 분 지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오로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30분에서 한 시간 이상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때로는 아예 외출조차 포기해야 한다.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 접근하는 것조차 협조 인력 없이는 불가능한 역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 불편함은 매일 반복되고, 누적된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능성 그 자체에 관한 문제다.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병원에 갈 수 있다. 이동이 제한되면 삶의 모든 권리가 제한된다. 일부 시민은 “그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너무 과격한 방법은 오히려 반감만 샅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모든 시위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위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시위는 사회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장애인들이 매일 겪는 차별과 어려움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 그 경험이 일회적인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공감과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시위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점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 진전 속도는 매우 더디다. 예산은 늘 부족하고, 행정적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동권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권이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근본적인 권리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사회는 결코 진정한 평등 사회가 될 수 없다. 정책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행동이어야 하며,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퇴색된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외치게 만들고, 그 외침마저 불편하게 여기는 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유모차를 든 부모, 무릎이 아픈 노인, 목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누구나 언젠가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도, 이동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는 결국 모든 이에게 편리한 사회다.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동시에 유모차 사용자를 위한 것이고, 휠체어용 경사로를 무거운 짐을 끄는 배달원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동권은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불쌍하니 도와주자"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양산한다. 이동권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근본적인 권리다.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평등의 모습이다. 장애인 시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몇몇 언론은 지하철 시위를 단순히 '출근길 혼잡'이나 '사회 질서 방해'로 축소하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방해한다. 언론은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위의 근본 취지와 맥락을 균형 있게 조명하는 보도가 요구된다. 이제는 감정적 반응을 넘어, 장애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에 귀를 기울일 때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우리 사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왜 지금까지 우리의 침묵을 외면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질문에 성찰과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시민의 권리를 시민 스스로 외쳐야 하는 현실은 분명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제는 사회가 먼저 나서서 응답하고, 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더 이상 지하철역에서의 절규로 장애인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 날이 도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등하고 존엄한 공동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의 불평등, 삶의 격차 : 노동 이중구조

학과 인공지능융합부

이름 서윤빈

주제 사회적 불평등

모든 인간의 하루는 24시간으로 동등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활용가능성이 보장되어있지 않다. 시간은 유한한 자원으로, 시간배분은 제로섬(sero-sum) 법칙의 특징을 보인다. 개인의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과 질은 시간관리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개인의 활용가능시간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소득수준,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 시간 분포나 활용의 불평등은 단지 개인의 시간 선호에 따른 선택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젠더관계의 성격, 임금 및 노동시장의 구조에 의해 좌우된다. 한국에서 시간배분 논의는 일·생활균형과 관련하여, 근로 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제 활용촉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근로시간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의 2019년 전체 취업자 기준 연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노동시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장시간 근로측면에서 지속적으로 OECD 1,2위를 다퉈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시장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020년 기준 16%로 OECD 전체평균 13.9%보다 높았다. 즉, 타 국가와 비교 한국 노동체제의 특징은 저임금·장시간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산업화시대 당시의 생산체제, 경제적 환경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 조건 속에서 성립되어 하나의 제도화된 체제로서 유지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생산성 저하와 남녀 간 일·생활 역할의 갈등을 유발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시도되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저임금·장시간 노동문제 중 저임금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당초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어 정부에서는 2017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으로, 실제 한국의 전체 취업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8년 1,993시간, 2019년 1,967시간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과도한 업무와 휴식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통계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신청현황은 2016년 577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747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과로사 사망한 노동자는 21명으로 집계하였다. 노동자의 사망이라는 가시적인 사건 외에도 장시간 근로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 및 일·가정 양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이다.

그렇다면 장시간 노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장시간 노동의 원인에는 포괄임금제나 노동시간 규제 부재 등의 장시간 노동체제 속에서 형성되고 구조화된 제도, 산업화시기의 생산체제 등 다양하다. 이 중, 저임금·장시간 노동 가설은 한국 노동시장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낳은 기본임금에 대한 소득보전 동기로써의 추가적인 노동으로 설명한다. 즉, 노동시간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노동시간당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자발적 혹은 불가피하게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게 되어 생활전반의 시간부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시간부족 문제와 일과 가정의 불균형, 근로자의 건강악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간빈곤’은 단순히 개인의 시간 관리 실패가 아닌, 구조적인 노동 환경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 육아 공백, 자기계발 기회의 상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며, 결국 전반적인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의 중첩관계를 다룬 이중빈곤은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차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사관계 등의 구조적 제도적 요인에 따라 이중화되어 있으며, 노동자는 노동시장 내 지위에 따라 고용안정, 임금수준, 사회적 임금 등의 측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 노동자의 저임금과 소득부족 문제의 기원은 IMF 이후 지속된 기업의 효율성과 노동 유연성을 강조한 신자유주의 경제담론에서 찾을 수 있다. IMF 이후 기업들은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나 임금억제 등의 노동비용 삭감을 통해 경영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자의 임금상승율의 하락과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로 이어졌다. 노동시장은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변화 과정을 거쳤고,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 요구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임금 유연성 확대와 임금 하향 조정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을 대폭 확대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기업들은 임금 유연성이나 기능적 유연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고용의 외부화를 통한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사회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양산을 유발했고, 이는 기존의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와 대비를 이루며 ‘이중노동시장(The Dual Labor Market)’을 형성했다.

노동시장이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이중구조화됨에 따라, 각각의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간의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는내부자-외부자 문제(Insider-Outsider Problem)로 이어졌다. 노동시장 내 지위에 따른 격차는 임금과 더불어 고용안정 측면의 근로조건들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이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초기 이중노동시장과 관련한 논의는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이중구조 논의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영향은 비단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보호 수준이나 일자리 질적측면에 까지 영향을미친다.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보험 및 법정복지 급여부터 급여제공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는 않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정외복지 급여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은 정규직 근로자에 한참 못 미치는 정도를 보인다.

시간 부족은 공식 및 비공식 노동을 포함하는 시장 노동과 가사노동 등의 비시장 노동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여 기초적인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주권을 상실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시간에 대한 활용 가능성과 주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노동시간을 늘리고 자유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시간 사용 전반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시간부족 문제는 근로시간 이외에도 무급가사노동과 개인의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개인유지시간을 고려한 시간빈곤의 차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내·외부 노동시장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성 및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적 보호 차원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더불어,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은 근로조건을 포함한 전반적 일·생활 측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중노동시장 내 지위에 따른 시간과 소득의 불평등한 배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시간자원의 불평등한 배분과 관련한 논의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이 있다. 베블런은 산업화 이후 미국의 소비주의 사회의 산업 발전과 사유 재산 제도 간의 모순을 비판했다. 그는 산업 자본주의 사회는 기계 및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 효율성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혜택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며, 이때 혜택을 독점하는 상류집단을 ‘유한계급’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과시적소비’와 ‘과시적여가’의 문제를 비판하였다. 유한계급은 ‘과시적소비’을 통해, 다른 사회적 지위 집단과 자신을구별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지위나 명성을 확인하고자 하며, 이러한 과시적 낭비의 규범은 여가소비에서 ‘과시적 여가’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때의 과시적 여가는 게으름이나 나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과시적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시간의 비생산적 소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한계급은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증가로 여가를 과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유한계급의 낭비의 동기는 ‘부를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명예’이며, 이때의 부는 얼마나 많은 가족 구성원을 ‘일의 연속’으로 해방시키며, 시간에 대한 과시적 소비를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더불어, 부르디외는 계급분류의 요소에 마르크스의 '건제자본'외에 '문화자본'의 개념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경제자본에 근거한 계급차이로는 전부를 설명할 수 없으며, 비경제적 요인인 문화에 대한 독해수준

즉, 문화적 취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문화자본 이론의 핵심은 자본의 구조와 양에 따라 문화취향이 달라지고, 이러한 문화취향은 사회적 '구별짓기'의 수단이 되며, 사회적 재생산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즉, 그는 여가의 영역을 계급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문화적 취향과 실천이 가시화되고 자신이 속한 계급과 타 계급을 구분하는 상징체계가 발현되는 장으로 재위치시켰다. 실제 그의 논의에서 여가는 노동 이외의 잉여시간이라는 점에서, 여가시간의 확보와 실천은 사회계급의 형성과 재생산을 구획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시간은 계층에 따른 분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득부족과 관련한 빈곤의 측면에서도 접근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생활수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이와 관련하여 라운트리는 빈곤과 관련한 최초의 과학적 접근을 시도했던 인물로, 그는 빈곤여부를 측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빈곤선(poverty line)을 제시했다. 그는 빈곤을 1차적 빈곤과 2차적 빈곤으로 구분하며, '총수입이 육체적 효율성의 유지에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기에 불충분한 경우'를 1차적 빈곤으로 정의하고, 이때의 최저수준을 식비, 주거비, 연료비 등으로 계산하였다. 즉, 빈곤의 기준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미충족'이나 '개인의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많은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 문제를 경험하고있으며, 이로 인한 일·생활 전반의 질과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의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즉, 현대의 빈곤은 소득뿐만 아니라 시간자원의 측면까지 확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일부 노동자들은 소득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며 소득의 빈곤이 시간빈곤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빈곤 문제의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재화의 양이 아닌 시간차원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시간 또한, 기본적 욕구와 관련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의 상충관계에 대한 접근 또한 필요하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 Doeringer & Piore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노동시장은 분절되어있고 분절된 노동시장에 따라, 다른 임금결정과정과 존재하며, 분절된 노동시장 간 근로자의 이동은 매우 제한되어있음을 설명한다. 상술했듯, 내부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 다양한 내부 승진기회, 양호한 근로조건 등을 특징으로 하며, 외부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낮은 승진기회, 열악한 근로조건, 높은 이직률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이중경제구조(dual economy)에서 기인한다. 한 경제 시스템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노동시장과 구분되는 원칙을 가진 기업 내부 노동시장(internal labour market)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내부노동시장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단일기업 외에도, 소위 대기업·중대기업 등 이와 비슷한 지위를 누리는 기업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독점적 지위의 기업들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은 시장 내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Doeringer & Piore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며, 그 핵심은 안정적인 고용관계와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해당 기업의 독점이윤으로 이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타 기업에 우선해 뛰어난 인재를 선점하고,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함과 더불어,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부노동시장과 차별성을 부여한다. 또한 훌륭한 인재들의 선점을 전제로, 이들이 기업 특수 숙련을 형성하게끔 함으로써 더욱 안정되고 공고한 인력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내부노동시장의 고착화·분절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을 비교하며, 그 차별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내부 노동시장의 경우, 고용안정성, 높은 임금, 우수한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 반면, 내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노동자의 경우 설사 동일한 능력을 지닌 노동자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관계 및 사회적 보호로부터의 배제 등에 시달린다.

이러한 이중구조에 따른 격차는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유연성 확대를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을 대폭 확대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기업들은 기능적 유연성이나 임금

유연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고용의 외부화를 통한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즉, 외부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증가한 반면 정규직을 위한 내부 노동시장은 점차 폐쇄되며, 이중구조 내 내부자·외부자 간의 이동은 어려워졌다.

경제위기와 서비스 산업으로의 사회 구조 변화 과정에서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착화되었으며, 점차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분절되어 왔다. 초기 고용 형태, 기업 규모에 의한 이중구조는 직업 계층, 노조 유무, 사회 정책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불안정 노동자들이 양산되었다. 외부 노동시장에 위치한 불안정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 임금 수준, 사회적 급여 수준에서 내부자와 비교해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이중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강조하는 노동 윤리에 입각한 탈빈곤 정책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근로 연계 복지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회정책에는 ‘근로장려세제’가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연계 복지정책 중 취업 유인 정책의 일종으로, 차상위에 위치한 근로빈곤층의 노동 공급 증가와 자발적 빈곤의 감소를 목표로,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세제 방식으로 취업 및 근로시간 확대 시 순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소득과 시간의 이중빈곤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근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보편적인 소득 보장정책이 필요하며, 자산조사나 근로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주기적 현금급여인 기본소득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근로시간을 요구하는 근로장려세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에 따라 유사한 빈곤수준에 놓인 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빈곤함정의 문제 또한 완화할 수 있다. 더불어 보편성과 현금성이라는 특성은 고용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빈곤자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부작용에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향후 근로연계복지는 근로자의 노동량이 아닌 숙련수준 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연계복지는 좁은 의미로 공공부조 또는 실업부조 수급자에게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취업유인 정책’을 의미하지만, 넓은의미로써, 구직자 및 근로자의 인적자본을 증대시키려는 직업훈련을 포함하는 개념인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이에 이중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증대가 아닌 직업훈련이나 기술향상 지원 등의 인적자원개발 측면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변화하는 기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 단위의 교육훈련에서 정부 훈련비용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엄격한 ‘직무 관련성’으로, 기업의 직접적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수준 이상, 일정 직무 영역에 한정된 영역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단순히 특정 분야의 지식뿐만 아니라, 기초 수준의 직무공통기술, IT 기술, 문제해결능력 등의 융복합적 기술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기술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향후 직업 능력개발 훈련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숙련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다 시장의 기술수요와 정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 단위를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세분화해야 하며, 기존의 기술훈련제도의 교육 내용의 다양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그리고 평화를 향한 희망의 목소리

학과 인공지능융합부

이름 정지원

주제 세계시민

가자 지구.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땅. 봉쇄로 인해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해져 '옥외 감옥'이라고도 불리는 가자 지구에는 피와 시체, 그리고 비명소리만이 감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피난처였던 가자 지구는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차가운 탄환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음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약 2년 가까이 지속되며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세계 이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전쟁은 종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그리고 '시온주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온주의를 알아야 한다. '시오니즘'이라고도 불리는 시온주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주의 운동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속에서 탄생했다. 유럽 곳곳에 흩어져 박해받던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가나안'으로 불리는 팔레스타인 땅에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고자 했다. 시온주의 운동의 확산과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은 이를 가속화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대거 이주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통치령에 포함됐다. 유대인들은 2년 가량 영국에 투쟁했고, 결국 영국은 위임통치를 포기한 채 이를 국제연합(UN)에 이관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할안을 제시했다. 먼저 56%를 유대국가로, 44%를 아랍국가로 하고,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은 유엔의 신탁통치 아래 모두에게 개방된 국제도시로 둔다는 것.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들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국가 건설이 필연적으로 원주민인 팔레스타인 사람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끝없는 폭력의 현장

지난 23년 10월에 이어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연료와 식량 등 필수 물자의 공급을 차단한 데 이어 대규모 지상 침공을 가했다. 2년에 걸친 폭력과 학살로 가자 지구는 초토화됐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민간인과 아이들, 심지어 그들을 구하고자 타 국가에서 파견돼 구조 활동을 벌이던 UN 직원들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방치됐고, 일부는 굶주림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시도때도 없이 들려오는 미사일 소리에 트라우마를 지니게 됐다. 한때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졌던 거리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와 희생자의 시신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런 참혹한 짓을 벌인 일부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은 자신들이 죽인 이들의 소지품을 '전리품'이라 부르며 이를 SNS에 게시해 조롱했다.

가자 지구에서의 희생은 단순한 전투의 결과를 넘어선 명백한 학살이며 무차별적 폭력 행위다. 이스라엘의 학살 행위를 전 세계가 비판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이스라엘은 전쟁범죄를 지속하고 있는 걸까.

◆ 국제사회의 침묵과 방관

이스라엘의 무차별 학살행위 과정에서 국제법은 반복적으로 무시됐다. 학교와 병원 등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폭격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전쟁 중 기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협약도 무색해졌다. 이-팔 전쟁 상황을 생중계하던 기자들이 공격받고 목숨을 잃었다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학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몇 서방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되려 이스라엘의 승리를 원하기도 한다. 처벌이 없는 법은 형법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 세계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비극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존재할까. 국제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보았다.

첫째, 가짜뉴스에 경계심을 가져라. 옛말에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다. 근거 없는 정보라도 여러 사람이 퍼뜨리면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뜻이다. 관심이 적은 사람일수록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에 쉽게 물들게 된다. 또, 오늘날 AI 기술은 실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만들 정도로 발전했다. 따라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신력 있는 언론과 전문가 계정의 확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행동해라. 상황이 지속될수록 사람은 무뎌지기 마련이다. 처음과 달리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럼에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되,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가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제재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시간이 된다면 주변인들에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계속해서 알리고, 서명 캠페인에 동참하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막고자 하는 시위에 참여하자. 팔레스타인 난민과 민간인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며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더 좋다.

셋째, 언제 어디서든 희망을 놓지 마라. 어느 상황에서든 악은 선보다 돋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잊지 말자.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알리고자 분쟁 현장으로 향하는 기자와 의료진들이 있다. 자신의 커리어가 끊길 걸 알면서도 팔레스타인에 연대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존재한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힘이 된다. 그리고 이런 작은 힘들이 모이고 모여 언젠가는 전 세계가 폭력을 멈추고 정의를 실현하도록 촉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시민으로서 우리의 관심과 실천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제사회의 침묵을 깨고,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할 때다.

◆ 글을 마치며

"예수의 탄생지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보다 더 반기독교적인 행위는 없다." 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취재하던 한 언론인의 발언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제 단순히 종교적,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었다. 이걸 막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의 인권과 상호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무너져내릴 것이다.

필경 구원받지 못할 소수의 극단적 이념과 이해관계로 인해 발발한 전쟁. 아무런 의미 없는 학살 행위가 너무나도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죽음을 남겼다. 하루빨리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기를, 그리고 평화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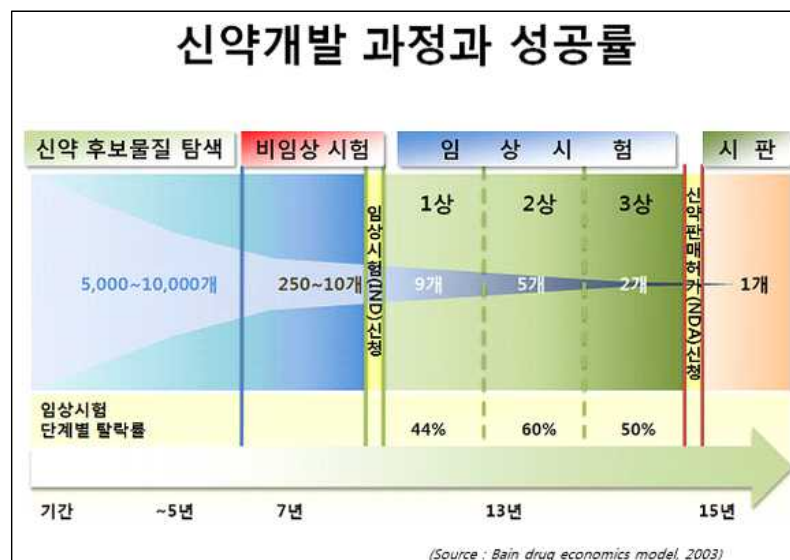
학과 약학과

이름 박유빈

주제 SDG's

한 번 투약하는데 20억인 약물, ‘졸겐스마’를 들어본 적 있나요? ‘졸겐스마’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입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 등 중추신경계 운동신경세포 사멸로 신체의 모든 근육이 약해지는 치명적인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졸겐스마를 투약할 경우 단 한 번 치료로 정상적인 활동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매우 비싼 가격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고가 의약품이 왜 존재할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신약 개발을 하는데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소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효과가 확실해야 하고, 부작용도 적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은 초기연구,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허가 및 심사와 같은 긴 단계를 거치는데 평균 10-15년이 걸리고, 비용도 약 2조원이 듭니다. 신약 개발 성공률도 10% 미만으로 낮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높은 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가 크고, 기존 치료제가 없거나 대체 불가능한 신약으로 제약사가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 1회 투여로 장기 효과 기대할 수 있어 기존 치료제 대비 초기 비용 높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적 편익, 위해, 비용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지, 한 개인에게 자원을 배분한 결과가 그 사회에 속한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자원배분의 기준으로 치료 효과, 필요성 정도, 비용-효과성이 제시됩니다.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약품 급여 목록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치료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등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증 희귀질환을 위한 초고가 의약품의 경우 급여 목록에 등재하면, 낮은 비용으로 보다 치료 효과가 좋은 다른 약물들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이 가격이 높더라도 치료의 효과가 확실하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겪으면서 드는 지속적인 치료 비용과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한 번의 약물 투여가 확실한 치료를 보장한다면 더 나은 선택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생활이 가능해진 주체의 생산성은 올라가고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비용이 낮아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고가 항암제와 희귀 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하고 있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는 2022년 7월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어 비급여 시 20억이었던 약물이 최대 약 600만원 수준으로 경감했습니다. 암 치료제로 알려진 CAR-T 치료제인 킴리아는 2022년 4월부터 적용되어 최대 약 600만원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동시에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환급제는 1회 투여 치료제 등 고가 신약의 높은 가격과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기존 평가 방법과는 다르게 개별 환자의 약제 투여 성과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환급금을 달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가의 의약품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이점을 주고, 건강 보험 등재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다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고가 중증질환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는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약품이 가치가 있는지 시험하고 판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등재 및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초고가 의약품과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인 ‘Good Health and Well-Being’,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1.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3312806632428304>. 이데일리. “‘한 번에 20억’ 국내 최고가약 졸겐스마, 건보적용 국내 첫 투여.” (접속일: 2025년 6월 2일)
2.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
3.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사회약학분과회. 『약무행정과 경영관리(3판)』. 서울: 범문에듀케이션. 2023

SDGs의 걸림돌, 폐의약품

학과 약학과

이름 김용준

주제 SDG's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폐의약품 처리 문제

폐의약품 처리 문제는 2008년 환경부가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후 2010년에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였고, 언론을 통해 폐의약품의 환경 유출 및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폐의약품 처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2번 목표인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약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폐의약품 처리 홍보 활동을 하고, 수거함을 학교 곳곳에 설치하는 봉사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홍보 활동을 하더라도 그때만 잠깐 폐의약품을 수거할 뿐, 내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폐의약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디에 버리면 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느낀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폐의약품의 문제점

폐의약품 처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바로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4대강 130곳에서 19종의 약물이 검출되는 등,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폐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마약류와 항생제, 피임약 등 유해성 위험도가 높은 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다.

연간 발생량 및 수거율

그렇다면 폐의약품 처리 현황은 어떨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간 약 6,000~6,700톤의 폐의약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수거되는 양은 712.8톤(2023년 기준)으로, 전체 발생량의 약 10%에 불과하다. 2022년 수거량은 486.9톤이었으며, 2023년에는 46.3% 증가해 712.8톤이 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폐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다.

수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수거 체계를 살펴보았는데 2023년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에 참여하는 곳은 53곳, 우체통을 통한 수거가 가능한 곳은 48곳밖에 없었다. 또,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32.7%(74곳)에 불과했다. 아직도 수거할 수 있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배치되지 않았고, 관련 조례가 없는 곳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제도 미비의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시민 인식과 배출 실태

그렇다면 과연 제도 미비만이 문제의 원인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서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75%에 달했고, 절반 이상이 폐의약품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에 버린다고 답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환한다는 응답은 8%밖에 안 됐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국·보건소를 통한 수거량이 전체 폐의약품의 7.8%에 그쳤다. 결국,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있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인식 부족 문제로 폐의약품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의약품 문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해외에도 우리나라처럼 폐의약품 처리 문제에 직면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어느 정도 해결한 나라들이 있다.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도입하여 제약회사 등이 비용을 부담하여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시민들이 쉽게 폐의약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거율이 높고 제도의 지속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본받을 만한 제도인 것 같다.

폐의약품 수거 장소를 늘리는 것은 분명 수거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설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나타내려면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버릴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는 그곳이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 장소라고 생각한다.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를 버린다. 이 때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한다면 폐의약품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폐의약품은 집에 방치되어 있기에 보건소나 약국보다도 더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거함 설치부터 유통과 처리까지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제약회사와 정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수거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까지 도입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하지만 나는 제일 중요한 건 시민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아지더라도 결국 폐의약품을 버리는 당사자들이 이를 모르거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전히 하수구나 일반쓰레기로 배출될 것이다.

시민들이 약을 구매할 때 직접 마주하는 사람,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 바로 약사와 약국이다. 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영향이 클 것이다. 의약품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폐의약품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에게 어떤 악영향을 일으키는지 그 심각성을 알려주고, 폐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복약지도만 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폐의약품 처리 방안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약사의 필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이름이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 교육격차는 사라질 수 없다

학과 **상담심리학과**

이름 **장하늘샘**

주제 **기타(교육)**

인생은 입시의 연속이다. 대학교 입시가 끝나고 우리 또 다른 입시를 위해 우리 스스로를 서열화 한다. ‘어느 대학에 다녀요?’ 라는 질문은 대학생들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이 질문은 단순 궁금증이 아니라,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대학의 이름에 따라 줄세워지고 그 기준에 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강요당하며 들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낀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격차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상위권 대학은 단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수시전형은 더욱 그렇다.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우위에 있다. 이들 학교는 입시에 관련된 커리큘럼, 풍부한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적인 생기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일반고 학생들과는 출발선부터 다르다. 모두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아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반고와 다르게 지원도 안되기 때문에 학비도 비싸고 입시 준비와 면접을 위해 사교육도 필수적이다. 이를 보았을 때 부모의 경제력이 곧 자녀의 교육력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설령 사회배려 전형으로 이들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도, 학원비만 수십만원이 되는 내신 특강반을 따라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같은 반 아이들 뿐 아니라 전교의 모든 학생들이 과목 전체를 사교육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이처럼 교육의 기회는 겉보기에는 열려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나뉘어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대학 입학 후에도 계속된다. 대학 간 서열화는 인서울과 비수도권, 일반대와 전문대, 심지어 인서울 안에서도 명문대와 그렇지 못한 대학으로 나뉜다. 이런 서열은 대학 졸업 후 취업과 사회적 평가로도 이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높은 대학을 목표로 끝없이 경쟁한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선생님께서 너희는 친구이기 전에 경쟁자 라고 하였던 적이 있다. 그만큼 학생들은 사회의 시선에 의해 서로를 경쟁상대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 더 높은 서열의 대학을 선택하게 되고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룬다. 교육이 계층 이동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층을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공공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서열이 뚜렷하지 않다. 학생들은 대학의 이름보다 본인과 잘 맞는 전공과 지역적 여건,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을 진학한다. 직업교육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대학에 꼭 진학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 또 핀란드의 경우 한국처럼 대학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한국과 달리 두 체계간의 위계가 거의 없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일반대학 석사과정에 진학하거나, 사회에서 일한 뒤 다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또한 모든 학위과정을 마친 뒤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한국과 다르다. 이에 더해 직장을 다니다가 새로 대학을 간다고 하면 수군수군 뒷말이 붙는 점과도 다르다.

독일과 핀란드의 공통점은 대학의 이름보다는 무엇을 배우는지와 그 과정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현실과는 다르다. 우리는 여전히 입시 결과가 중요하고 그 결과가 한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또 그 결과

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 과정에서 도전할 수 없는 선도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런 고착화된 사회 속에서 살 수 없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교육도 변화하여야 한다. 우리가 내세우는 교육평등이 단순히 대학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이름과 상관없이 대학에 진학 후 어떤 전공을 배우고 그 과정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점이 될수 있게 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번째로 대학 간 공동학위제와 복수전공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있다. 이는 대학의 이름보다 전공과 학습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게 해주고, 대학 서열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전공 중심의 진학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넓히는 방법이 있다. 셋째로는 지역간의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이다.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균형 있는 투자를 확대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한다. 학생들이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의 특성화를 지역하고 그렇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넷째로 공교육내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 부터 본인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본인의 적성을 찾고 꿈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바라야 할 교육의 방향은 서열이나 명문 대학 입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어야 하며, 사회 전체가 함께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대학의 네임벨류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경제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에 갇혀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하지만 독일, 핀란드 등 해외 사례에서 보듯, 대학 이름보다 전공과 실질적 배움에 집중하는 교육 체계가 가능하며, 이는 학생들의 자기 발견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이다.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육이 다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고, 모두에게 공평한 가능성의 장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과 적성을 찾고, 그 꿈을 향해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교육 평등과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랜시간동안 고착화 된 사회의 문제이고 당장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 나가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교육격차가 완화되고 교육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다. 학생들이 대학의 이름에 갇혀 본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당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위해 노력하고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분명 지속적으로 변화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관심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 혐오, 이제는 멈춰야 한다.

학과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

이름 반한별

주제 정치적 이슈

1. 혐오 표현의 등장

먼저, 혐오라는 단어는 언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등장하였을까? 1997년 IMF 사태가 촉발된 사회에는 급격한 양극화 현상이 찾아왔다. 사회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부정적 편견을 기반으로 한 '적대성의 발현'이 일어나는데 이때 부정적 편견이 혐오 표현으로 더 자라나는 것이다.

2. 혐오 표현의 배경

첫째, 우리 사회에서 혐오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음을 뜻한다. 호명 과 낙인을 통해 권력을 지닌 세력이 약자를 사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지배 계층은 사회를 쉽게 통제하고 국민의 의식을 제어할 수 있다. 둘째로, 양극화는 나 자신을 대신할 다른 희생양을 찾도록 만든다. 자신이 극단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인데, 이는 '나만 아니면 돼,' 식의 방관적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에 나타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혐오 표현이 계속하여 성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고가 SNS를 통해 순식간에 널리 퍼져가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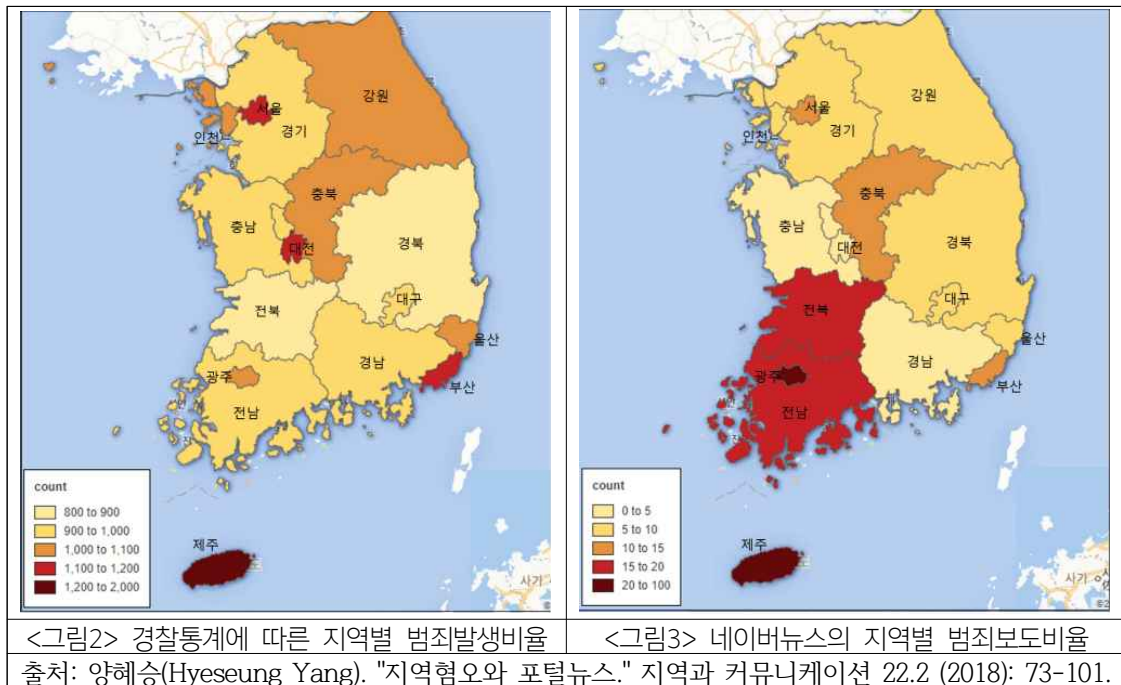
3. 혐오 표현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 청년인권인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거주 청년 1천여 명에 대한 오프라인 설문/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서울시 청년들의 대다수(87.7%)가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혐오표현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1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다는 범주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에 노출되었을 때 참여자 절반 이상이 혐오표현의 메시지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만 19세 이상 성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의 대상으로 '특정지역 출신'이 2위를 차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 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 사용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해당 집단이나 개인의 행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50.3%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6.7%,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라고 답한 비율은 19.7% '재미있어서'라고 답한 비율은 10.5%로 조사되었다.



4. 지역 혐오의 실태와 원인

지역 혐오 표현이 점점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SNS의 댓글만 봐도 지역 혐오 표현이 상단에 올라가 있는 빈도수가 잦아졌다. “2019년의 모든 일자 중에서 92일을 체계적 표집으로 추출한 후, 해당 일자의 네이버 뉴스 범죄기사(2,974건)에 달린 전체 댓글(130,539개) 중에서 지역 혐오성 댓글을 추려내 분석했다. 지역 혐오성 댓글은 5,762개였는데, 이 중에서 전라도 혐오성 댓글은 4,538개로 78.76%에 이르렀다.” 예로 어떤 사건에서 범인의 고향이나 거주지, 범행이나 검거장소, 혹은 범행 후 머무른 장소 등이 전라도라는 이유로, 전라도에 대한 편견과 비방, 멸시와 조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댓글들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을 넘어서 같은 나라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라고 지역의 사람들을 타자들로 취급하며 아무렇지 않게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소위 일베(일간 베스트)로 불리는 이 커뮤니티에서는 5·18광주민중화운동이 전라도 혐오 표현의 정점에 있다.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논문에 따르면 그들의 주장과 논거에는 5·18이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폭동 논리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태도가 있었으며 유공자에 대한 폄훼 프레임,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5·18과 연결시켜서 낙인찍는 프레임, 전두환과 계엄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프레임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문제는 나타난다. 그림2와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 범죄뉴스를 범죄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지역별로 범죄 발생비율·뉴스 보도비율은 차이가 있었다. 광주·전남·전북의 호남지역은 인구대비 범죄 발생비율이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았지만, 뉴스 보도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사 제목에서 범죄 발생지역이 명기되는 비율은 제주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살인·살인미수 범죄유형에서 높았다. 이렇듯 뉴스 기사에서도 지역 차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계속하여 지역을 부정적으로 노출하는 기사 제목이 늘면 그 제목만으로도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또한 지역 혐오 표현의 많은 경우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역사와 정치 환경 속에서 파생된 복잡한 현상인 것이다.



5. 혐오표현을 멈춰야 하는 이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혐오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와 ‘2021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절반이 위축감과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꼽은 혐오 표현 사용 이유로는 표현의 자유, 재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함, 타인이 하기 때문 등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내세워 타인을 깎아내릴 수 없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보장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미를 이유로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다. 단순히 재미로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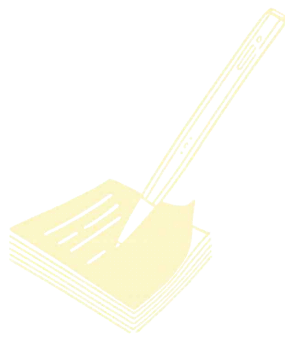
동체의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한 사회에서 서로 단합이 되지 않고, '맞다. 틀리다.'로 또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혐오표현은 뇌리에 쉽게 각인되고, 그렇게 표적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일상 생활에 나타나게 된다. 온라인에서만 사용하던 공격적인 표현을 오프라인에서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러한 환경은 배제된 구성원에게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게 할 수 있다. 특히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가져와 그 가치를 훼손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혐오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혐오는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문제다. 사람들에게 박힌 만연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노력이 필요하다.

6. 혐오표현 해결방안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하는 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희박하여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개인 외의 공적인 혐오표현 규제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법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인터넷 기업에게 가하는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이 타인에게 가해지는 혐오인 것은 말이 다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교육하는 방안도 재고되어야 한다. 개인의 일방적인 부정적 견해 내지는 편견이 사회에 일반화되어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최유숙(Choi Yu sook). "미디어상의 혐오표현과 해결방안으로서의 대응표현 연구 : 교양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15 (2021): 285-334.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의 인권통계 2023> 윤혜선,안정연,이호준,이동훈,오상인, 정성연,and 백승원. "혐오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연구." 법학논총 37.1 (2020): 25-68.
- 양혜승(Hyeseung Yang). "지역혐오와 포털뉴스."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2.2 (2018): 73-101.
- 양혜승. (2022). '홍어'라 호명되는 타자들(others): 네이버 범죄뉴스 맥락에서 전라도 혐오성 댓글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6(2), 36-70.
- 김경희, 조연하, 배진아. (2020).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노출경험 사례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499-510.
-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2021.5



AI 교사와 인간 교사

학과 유아교육과

이름 신주민

주제 SDG's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여 아이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 태블릿, AI 스피커, 교육용 앱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유아들의 학습과 놀이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교육과 원격 학습이 활성화되면서 유아들도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와 접촉하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러한 기술 환경 변화가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유아기는 인간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단순한 인지능력 습득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안정, 사회성, 언어 발달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전인적 성장의 시기다. 발달심리학의 대표적 이론가인 피아제는 유아들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움직이고 감각을 통해 환경을 탐색하며 인지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이가 손으로 만지고, 주변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세상을 배우는 경험은 디지털 콘텐츠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는 AI 동화, 교육 로봇, 스마트 학습 앱 등 AI 기반 도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활용이 아이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AI가 아이들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하거나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실제로 교육 실습 중 AI 스피커와 상호작용하는 아이를 관찰한 적이 있다. 아이는 AI에게 노래를 틀어 달라고 명령하며 즐거워했지만, 정작 교사나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장면은 부족했다. 이 경험은 아이들이 디지털 콘텐츠에 몰입하는 동안 중요한 사회적 경험을 놓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유아들은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 광고와 진짜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아이들의 건강한 인지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리터러시, 즉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길러져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흔히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유아기에도 꼭 필요한 교육 영역이다. 유아가 사용하는 콘텐츠가 단순히 재미 위주가 아니라,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의심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단순히 영상이나 앱을 보여주는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콘텐츠를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재자'이자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술은 분명히 유아교육의 보조 수단으로서 큰 장점을 제공한다.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놀이 기반 교육 콘텐츠, 다양한 센서와 연동한 인터랙티브 활동 등은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습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의 본질은 따뜻한 인간적 돌봄과 전문성에 있다. 아이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교사만의 고유한 영역이다. 사회성, 감정 조절, 창의적 사고와 같은 비인지적 능력 발달 역시 교사의 섬세한 관찰과 개입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AI와 디지털 교육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와 교사 연수,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유아용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디지털 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아이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부모 교육도 함께 강화하여 가정과 교육 현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과 인간 교사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환경만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아이들은 앞으로 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야 하며, 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능력뿐 아니라,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 능력도 길러야 한다. AI 시대에도 '사람다운' 배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자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또한 미래의 유아교육자로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 아이들과 마주 앉아 눈을 맞추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 안에서 스스로도 배워 나가는 교사가 되고자 한다.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는 교육자. 그 과정 속에서 나 역시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기술은 분명 교육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 교사의 온기와 진심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교사의 본질을 잊지 않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려 한다.

결론적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교육 현장에 스며들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기술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되, 그 속에서도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적 판단과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앞으로도 그런 균형을 지켜나가고 싶다. 감각적으로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고 싶다. 결국 내가 바라는 교육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유아들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다.

약을 위한 사회인가, 사람을 위한 사회인가

: 지속가능한 약물 소비와 생산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과 약학과

이름 조수희

주제 디지털 리터러시

나는 문득 등교를 하다 광고에 집중하는 순간이 있다. 지하철과 버스에는 자주 보이는 광고들이 있다.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비타민, 다이어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대부분이다. 광고 문구도 늘 비슷했다. “노년에도 건강하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챙기세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선택” 같은 말들. 광고 속 사람들도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계속 보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진짜로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약이 필요한 걸까?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다 도움이 되는 걸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어르신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약의 종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 비슷한 약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만 같지는 않다. 약이 꼭 필요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한 사람만 쓰면 좋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중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버려지기도 하고, 약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왜 이렇게 많은 약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더 집중하고 싶어졌다.

사람들은 약이 버려지면 환경이 오염된다고들 한다. 하수구로 흘러가고, 땅에 묻히면 물을 오염시킨다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약이 이렇게 남게 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버리지 말자가 아니라 왜 이렇게 남게 되었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

병원에서 약을 받을 때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약 이름이 ‘타이레놀’처럼 특정 브랜드 이름으로 적혀 있다. 사실은 그 약의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건데, 그런 이름은 잘 안 보이고 사람들은 항상 익숙한 이름만 본다. 이게 그냥 의사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성분은 같지만 비슷한 약이 계속 생기고, 약국에는 처방되지 못한 약들이 점점 쌓이고 결국 소비되지 못한 약은 버려지게 된다.

요즘엔 바이오시밀러라는 복제약도 많이 나오고 있다. 원래는 비싼 약 대신 쓸 수 있게 만든 약이다. 지금은 거의 오리지널 약과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서 다시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경쟁하는 바람에 비슷한 약이 넘쳐나고 같은 성분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많아지는 상황이 생긴다. 결국 쓰이지 않는 약은 폐기되고 이걸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결국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폐의약품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 잘못 버려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우리가 사는 구조 자체에서 생긴 문제다. 병원은 브랜드 이름으로 약을 처방하고, 제약회사는 경쟁하듯 비슷한 약을 만들고,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이 처방전을 받아들인다. 그러고 나서 약이 남아서 버려지면, 기업과 정부는 개인 탓을 한다. “왜 안 먹고 버렸냐”, “환경 생각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이다. 물론 각자가 버리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이 구조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는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이란 말을 많이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에 12번이 바로 그거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책임 있는 소비는 지적하면서 책임 있는 생산은 잘 말하지 않는다. 제약회사들은 계속 약을 만들고, 광고하고, 팔고 있고, 소비자한테만 “잘 써라, 낭비하지 마라”라고 말한다. 소비자들 중에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찾기도 어렵고, 약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결국 구조는 그대로 이고, 개인한테만 책임을 묻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캠페인을 해도 약은 계속 버려질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필요한 약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게 막는 일이다. 그러려면 약을 성분명으로 처방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바이오시밀러처럼 비슷한 약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약을 만들 때부터 버려질 걸 생각해서, 자연에서 잘 분해되거나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약이 많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쓰이지 않는 약은 자원 낭비이고, 환경에도 부담이 된다. 우리는 약을 먹고 건강해지고 싶은 거지, 약을 위해 사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약을 받을 때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약 이름이 ‘타이레놀’처럼 특정 브랜드 이름으로 적혀 있다. 사실은 그 약의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건데, 그런 이름은 잘 안 보이고 사람들은 항상 익숙한 이름만 본다. 이게 그냥 의사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성분은 같지만 비슷한 약이 계속 생기고, 약국에는 처방되지 못한 약들이 점점 쌓이고 결국 소비되지 못한 약은 버려지게 된다.

광고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노인들 뒤에는 약을 많이 팔기 위한 회사들의 전략이 있고, 그걸 규제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 결국 그 끝엔 쓸모없이 남은 약들이 쌓이고 있는 현실이 있다.

나는 약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약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이 제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래 제공되려면 지금처럼 과하게 만들고 버리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특히 버려지는 데 쓰이는 돈과 자원을 신약 개발이나 희귀병 치료 쪽에 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짜 건강한 사회는 약을 많이 쓰는 사회가 아니라,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있는 사회라고 믿고 있다. 약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쫓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SPC의 몰락 예견된 일이었다.

학과 식품영양학과

이름 김채영

주제 ESG

최근 기업 경영의 중심 패러다임은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선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포함한 ESG 경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동자 인권, 윤리 경영, 위기 대응 능력 등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한다. 소비자들은 SPC계열 매장 방문시 항상 듣는 멘트가 있다. 바로 '해피포인트 적립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이다. SPC는 스스로를 행복한 재단으로 표현하며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상으로 행복한 세상을 위해 나눔, 공유, 참여하고 창의적 도전정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개인과 사회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간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들은 노동자들의 행복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SPC그룹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 노동환경 문제, 부적절한 위기 대응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불매운동과 신뢰도 하락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본 글은 SPC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ESG경영지침을 바탕으로 문제의 본질과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기업이 진정한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고찰하고자 한다.

2022년 10월 15일 새벽 6시경, SPC 계열사인 SPL평택공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23살 여성으로 입사한지 3년이 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 피해자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배합하는 교반기에 팔이 끼면서 몸이 빨려 들어갔고,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교반기는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뚜껑을 열었을 때는, 기계가 멈추도록 하는 인터록이 설치되어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또, 공장 근무 매뉴얼은 2인 1조가 원칙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 SPC측에서는 해당 공장이 작업 인원은 2명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모든 공정을 2명이함께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정상의 여러 가지 업무를 2명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변했고, 교반기에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였다. 실제 같이 근무했던 동료에 따르면 작업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담당자가 굳이 근무자 앞에 와서 핸드폰으로 시간을 재어 압박감을 주는 행동들을 예전부터 해왔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자 2022년 10월, SPC 허영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경영을 선포했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연 후 불과 1년도 채 지나지않아 2023년 8월 SPC계열사 공장인 사니 성남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일어났다. 또, 2025년 5월 19일 오전 3시경, 경기도 시흥시 삼립 제빵공장에서 작업하던 50대 직원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크림빵 냉각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하게 되었다.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기계 밑으로 들어가 수동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동료 근로자들은 공장이 풀가동상태로 돌아갈 땐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빠격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잇따른 산업재해와 미흡한 대응은 SPC의 윤리경영 의지를 의심케 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ESG 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따르면 ESG등급은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총 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절대평가로 등급별 점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분류된다. 2024년에 평가된 SPC의 ESG등급은 통합등급은 B, 환경 등급은 B, 사회 등급은 C, 지배구조 등급은 B를 받았다. B등급은 보통등급으로 다소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로 체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고, C등급은 취약등급으로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제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2023년의 SPC ESG경영 평가와 비교해보면 통합구조는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갔지만 사회 등급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했다.

SPC홈페이지에 따르면 환경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 20%감축(2020년 대비)

을 목표로 하고있고, 환경경영 전담조직 구축, 에너지 고효율 설비 및 관리시스템 투자,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폐기물 감축 설비 투자, 친환경 포장재 및 원료 제품 라인 확대 등 5가지 과제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SPC 계열브랜드인 파리바게트는 케이크 제품에 동봉된 일회용 플라스틱 칼을 모아 고객센터로 보내는 ‘빵 칼 아웃 캠페인’을 전매장에 확대 운영하고 있고, 던킨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적극 활용하며, 다회용기 사용시 300원 할인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있고, 배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 구매시 동봉되는 핑크 스푼의 포장지를 비닐에서 종이로 변경하고, 맛보기 스푼도 나무로 만들어진 우드 스푼으로 교체하였다.

하지만 SPC의 온실가스 배출량은(단위 : $tCO_2 - eq$) Scope 1은 2019년 14,012, 2020년 14,399, 2021년 14,169, 2022년 15,607, 2023년 15,607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Scope 2도 2019년 24,337, 2020년 25,246, 2021년 26,544, 2022년 29,791, 2023년 29,835로 증가하고 있다. 배출 총량도 2023년에 가장 많은 양인 45,442를 기록했다. 또, 에너지 사용량(단위 : TJ)은 2019년 815, 2020년 846, 2021년 863, 2022년 948, 2023년 985로 매년 증가하고있고, 주요 원자재 사용량(단위 : ton)도 2019년 34,887, 2020년 40,699, 2021년 39,144, 2022년 45,770, 2023년 47,343으로 증가하고 있다. SPC는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11.4%)보다는 높은 수치로 보이지만, 기준 연도가 2020년으로 늦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감축 강도는 비교적 낮을 수 있다. 또한 폐기물 감축분이 포함된 혼합 지표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단독 기준으로는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SPC의 감축 목표가 진정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수준인지 판단하려면, 세부 실적과 감축 방식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SPC는 ESG중 S부문에서 가장 심각한 실패를 경험한 기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사회적 측면에선 SPC삼립은 인간존중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경영활동에서 어떠한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구성원의 자유의사가 아닌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적, 육체적, 조건부 구속에 의한 강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고려하여 선진화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신뢰받는 안전 경영 문화를 만든다 하였다. 하지만 2022년, 2023년, 2025년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발생 직후에도 사고현장만 천막으로 가려놓은채 빵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다. 또, 2022년 10월,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SPL 노동조합이 조합원 추모제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발하였는데, 듣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거짓서명을 사인을 했고, 어느 이유가 됐든지 차별은 없다하였지만 3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다쳤을 때 응급처치가 우선이 아닌 30분간 세워놓고 잘잘못을 따지며 책임자를 찾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낸 뒤 의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는 SPC가 ESG 중 S부문, 즉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단지 미흡한 수준을 넘어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2년 평택공장사망사고당시, SPC측에서 빵을 만들다 돌아가신 고인의 장례식에 조문 답례품으로 SPC계열 브랜드인 파리바게트 빵 2상자를 갖다놓아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사례는 ESG의 S와 G 두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데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위기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배구조의 핵심은 책임감 있는 경영,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체계 확보, 투명한 의사결정인데,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붕괴되어 현재 사회에서는 SPC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SPC의 제품들은 ‘피 묻은 빵’이라 불리고있고, SNS에서는 SPC 계열 브랜드가 나열된 불매 리스트가 만들어졌다. 불매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때마다 점주들은 매출감소라는 큰 피해를 겪어야 했다. 사고방지대책을 미흡하게 한건 본사의 책임인데 가맹점주나 불안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지금까지 SPC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본사의 ESG 경영지침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지침으로 보여진다. SPC는 국내 식품기업 중 매출은 34위이지만 과자, 초콜릿, 빵 등 디저트 부문에서는 3위를 차지한만큼 소비자들에게 매우

알려진 식품기업이다. 이들은 2004년 중국 진출을 기반으로 꾸준히 글로벌 시장을 다양한 나라로 확대하고있으며,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11개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2025년 2월 기준, 파리바게트, 웨이크헵, 에그슬렛, 리나스와 같은 브랜드들을 총 650여 개의 매장으로 해외에 운영하고 있다. 최근 파리바게트는 미국의 비즈니스 매거진 '앙트러프러너'가 선정한 2025 프랜차이즈 500에서 42위에 올랐다. 그러나 윤리적 경영실패는 국경을 넘어서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국내에서 반복된 산재 사고와 노동 인권 침해 문제는 단지 내부의 문제가 아닌,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 노동자 착취를 통해 만든 제품이라는 낙인은 해외 언론과 소비자에게도 전파될 수 있으며, 이는 SPC가 수년간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와 글로벌 성장 기반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SPC의 윤리준칙 제 1장 1조는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다. 소비자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최고의 제품이고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준다고 해도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안전이 방치된 채 만들어졌다면, 소비자는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피가 묻은 빵'이라는 비판의 수식어는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를 향한 목소리이다. SPC는 진정으로 소비자들을 위한다면,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부터 챙겨야 할 것이고, 국내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하기위해 SPC가 풀어야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출처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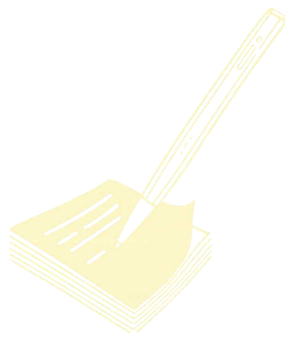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62>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98>

<https://www.spc.co.kr/>

https://www.cgs.or.kr/business/esg_tab04.jsp

<https://www.spcmagazine.com/%ec%84%b8%ea%b3%84%eb%a5%bc-%eb%ac%b4%eb%8c%80%eb%a1%9c-spc%ea%b7%b8%eb%a3%b9-%ea%b8%80%eb%a1%9c%eb%b2%8c-%ec%86%8c%ec%8b%9d/>



기후위기 시대, 청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학과 보건관리학과

이름 류채민

주제 SDG's

기후위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과 해수면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점점 더 잦아지는 이상기후 현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여름의 기록적인 폭염과 겨울철의 이상 한파,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을 직접 경험하며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 깊숙이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농업 생산 감소, 산업 활동 위축, 건강 악화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3번째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래를 살아갈 청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도전입니다.

SDGs 13번 목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SDGs 13번 목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하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정책과 교육 확대,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세부 목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교통과 산업 부문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농업 기술 혁신, 도시 및 인프라 계획의 전환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서 경제, 사회, 건강 등 삶의 모든 영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취약계층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주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가 간 및 세대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각지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대형 산불, 예상치 못한 홍수와 심각한 가뭄이 빈발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식량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염과 가뭄은 농작물 수확량 감소를 불러오며, 이는 곧 식량 가격 상승과 식량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도 심화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정전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기후변화는 건강에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열파는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는 각종 감염병의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러한 위협에 더욱 취약합니다. 사회경제적으로도 기후변화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집중시키며, 이로 인한 복구 비용과 산업 전환 비용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복합적이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역할과 실천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에는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스트라이크'와 같은 청년

주도의 대규모 기후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정책 제안, 캠페인, 친환경 소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청년기후행동과 대학생 환경 동아리 등 다양한 단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제도 개선, 탄소중립 정책 강화, 에너지 전환 등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친환경 제품 구매 등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청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답게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와 캠페인을 확산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창업과 혁신의 주역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환경 스타트업 창업,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은 기후위기 극복의 열쇠입니다. 국내외에서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친환경 기술, 업사이클링, 기후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세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이자 미래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력입니다.

국내외 청년 기후행동 사례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청년 기후운동가 중 한 명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는 10대 시절부터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운동을 이끌며 전 세계 청년들에게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영향으로 유럽, 미국, 아시아 등에서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정치권과 산업계에 큰 압박을 주어 일부 국가에서는 기후정책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년기후행동, 대학생 환경 동아리 등 다양한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 도심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에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기후 교육 확대, 탄소중립 정책 강화, 에너지 전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학생 환경 동아리들은 교내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 에너지 절약 챌린지, 기후변화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청년들이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적 과제와 미래 전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참여와 실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마련하고,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초·중·고 및 대학 교육과정에 기후변화와 SDGs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포함시켜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문제이기에 청년 국제 교류와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등 국제적 연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국가 청년들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친환경 산업과 재생에너지, 녹색기술 등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과제들은 청년 세대가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청년이 미래다

기후변화 대응은 SDGs의 핵심이자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기후위기 극복의 주체이자 미래 사회의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뒤 지구와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청년들의 작은 실천과 목소리가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청년이 앞장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셀프 브랜딩의 역설, 우리는 왜 나조차 상품화하는가

학과 학공외국어학부

이름 김진경

주제 기타(자아상품화)

1. 도입 - 셀프 브랜딩의 시대, 우리는 누구를 위한 연기를 하고 있는가?

"요즘은 자기 PR 못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는 SNS에서 자신을 꾸미고,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을 팔고, 면접에서는 브랜드처럼 자신을 마케팅한다.

그런데 나는 나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 나는 진짜 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허상인가?

현대 사회에서 '셀프 브랜딩'은 생존 전략이 되었다. 개인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는 자신을 상품처럼 포장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와 '보이는 나'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다.

셀프 브랜딩은 개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사회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브랜딩은 자아의 분열과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는 '팔리는 나'를 추구하게 되면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MZ세대에게 두드러진다. 이들은 SNS를 통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셀프 브랜딩을 일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나'와 '보이는 나'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셀프 브랜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자아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셀프 브랜딩의 시대, 우리는 누구를 위한 연기를 하고 있는가?

2. 본론 - 비판적 시각과 근거 제시

(1) 셀프 브랜딩의 배경: 왜 이런 흐름이 생겼나?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성과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아간다. 정규직보다 프리랜서나 N잡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이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그 속에서 셀프 브랜딩은 단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었다. SNS와 유튜브는 나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공개 무대가 되었고, 자기소개서는 더 이상 단순한 경력 요약서가 아니라 '자기 연출서'로 기능하고 있다. 마케팅 이론에서나 쓰이던 '브랜드 이미지'라는 개념이 이제는 인간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시대,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신을 전략적으로 포장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2) 긍정적 측면: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는 기회

셀프 브랜딩은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게 도와준다. 이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성장의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 계발과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셀프 브랜딩을 통해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취미나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또한, 직장인들 중에서도 블로그나 SNS를 활용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활동은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창구로 작용한다. 결국, 셀프 브랜딩은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3) 부정적 측면: 자아의 분열과 피로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리는 '보이는 나'를 관리하느라 '진짜 나'를 놓치고,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해진다. SNS에 올릴 사진 한 장, 자소서에 쓸 문장 하나에도 '이게 더 잘 보일까?'라는 기준이 먼저 작동한다. 그 결과,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감추고 꾸며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점점 내면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MZ세대는 SNS 피드의 완벽한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과 번아웃에 시달린다. 내 감정이 나 진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이미지'만 보여주려는 습관이 결국 자존감과 관계의 진정성마저 해치게 되는 것이다.

(4) 가장 큰 문제: '나조차 상품화'하는 사회 구조

셀프 브랜딩이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압박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 번쯤 멈춰 서야 한다. 인간은 점점 '경쟁력 있는 이미지'로만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감정도 관계도 수단화된다. SNS 속 인기 있는 인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자소서 우등생은 모두 공통으로 '잘 팔리는 자기'를 만든 사례다. 이들은 자기 감정을 콘텐츠화하고, 사생활도 마케팅 자산처럼 다룬다. 결국, 우리는 '존재'보다는 '노출'에, '진정성'보다는 '파급력'에 중심을 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는 나 자신조차 끊임없이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버전으로 리뉴얼하는 데 집착하게 되며, 이는 인간 고유의 내면성과 존엄성마저 점점 흐려지게 만든다.

3. 해결 방법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보여주기 위한 브랜딩'에서 '나를 이해하기 위한 성찰'로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SNS나 포트폴리오 같은 표현 수단을 외부 평가의 도구가 아닌 자기 탐색의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교육 현장과 조직에서도 브랜딩보다 '자기 이해'와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 기업이나 채용 시장은 '팔리는 이미지'보다는 '과정과 태도'를 더 중시하는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회 전체가 성공의 기준을 다양화하고, 비주류의 삶에도 존중을 보내는 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나를 자주 점검하고, 타인의 시선보다 내 감정에 더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SNS를 끄고, 가공되지 않은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 계발을 하더라도 경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서로의 '꾸미지 않은 이야기'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보이는 나'보다 '살아있는 나'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4. 결론 - 새로운 질문과 나의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팔리는 나'일까, 아니면 '살아있는 나'일까? 이 질문 앞에서 나는 꽤 오래 멈춰 서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나를 자꾸만 포장하고 꾸미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SNS에 글을 올릴 때도, 면접을 준비할 때도, '진짜 나'보다 '괜찮아 보이는 나'를 선택해 왔다. 하지만 그렇게 포장된 나에게 과연 나는 만족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감정을 외면했고, 때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도 잊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꾸며낸 나는 '살아있는 나'라기보다는 '팔릴 수 있는 나'였고, 그건 나를 상품처럼 여긴 결과였다.

이 글을 쓰면서 나 자신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고민해 보게 되었다. 이제는 조금씩 '보이는 나'보다 '나 자신과 연결된 삶'을 살아보고 싶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팔리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나, 그리고 그런 나를 존중해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 앞으로 나는 셀프 브랜딩이라는 도구를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꿔나가고 싶다. 더 이상 팔리기 위해 나를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말해주며 살아가고 싶다.

쓰레기 문제로 본 환경 위기와 사회적 책임

학과 화학생명과학과

이름 노유빈

주제 ESG

최근 우리 사회에서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누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도 여러 면에서 쓰레기 양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시절에 방역을 위해 사용된 마스크와 일회용품, 배달 음식 포장재 등이 도시 곳곳에서 쉽게 보이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무심함을 넘어 사회 전체의 소비 패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성수, 홍대와 같이 사람들이 자주 찾는 지역에서는 음료수 컵이 거리에 버려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나아가 공공 위생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쓰레기가 육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양으로 유입되어 우리 주변 바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과 기타 폐기물들이 해양 생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분해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선진국은 자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처리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그칠 뿐 아니라 국제 사회 내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사진1: 서울시 쓰레기 대란 관련 뉴스 기사>

우리가 머무르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의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새로운 매립지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히 새로운 땅을 마련하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도심 곳곳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 도시의 위생,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소비 패턴과 생산 방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른 소비와 대량 생산을 통해 즉각적인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쓰레기가 쌓여가는 현 상황은 우리의 생활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각각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할 때 환경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고,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곧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배출되는 포장재와 사용한 후 버려지는 일회용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소비문화와 생산 구조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 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 또한 바쁜 일상과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당장의 편리함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처럼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청소나 환경 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급증한 쓰레기 양은 단순한 우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소비 방식과 생활 패턴이 만들어낸 결과임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쓰레기를 단순히 처리하는 기술이나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있다는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환경을 생각한 소비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을 선택하는 등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누구나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인다면, 언젠가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돌리는 순환 경제 체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부터 포장,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업들이 이러한 노력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른 쓰레기 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처리 기술을 개발하거나, 해외 폐기물 처리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순환 경제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법과 규제를 만들고, 이를 철저히 실행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생산과 소비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에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부 선진국이 자국의 쓰레기 문제를 해외로 전가하는 방식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에서 공정한 폐기물 처리와 기술, 지식의 공유를 통해 모든 나라가 함께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환경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여러 사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모두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쓰레기 문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지만, 그 심각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소비와 생산 방식이 불러온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는 개인, 기업, 정부, 그리고 국제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은 변화들을 모아 큰 혁신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조금 더 나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정말 특수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쓰레기 문제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쓰레기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결과들, 예를 들어 해양 생태계의 파괴, 도시 환경의 악화와 같은 문제들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점차 개선되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오웰, 2025

학과 영어영문학과

이름 이현지

주제 정파적이슈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독재 정권을 풍자한 고전 소설 작가로는 단연 ‘조지 오웰’을 꼽을 수 있다. 그는 ‘1984’와 ‘동물농장’을 통해 독재 정권의 어두운 실체를 섬뜩하면서도 풍자적으로 그려냈다.

‘1984’ 속에서 사람들은 ‘텔레스크린’이라는 감시 장치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당한다. 텔레스크린은 사람들의 일상 은 물론, 생각까지 감시하는 장치이며, 이 장치를 통해 당국은 매일 ‘당국에서 승리했다’, ‘식량이 풍족해졌다’ 등의 긍정적인 정보만을 내보낸다. 그러나 이 정보만이 과연 진실일까? 주인공 ‘윈스턴’은 당국에 유리하도록 옛 신문 기사를 조작하는 일을 하면서 당국이 내보내는 정보들이 거짓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에 의문조차 갖지 않은 채 세뇌당하며 살아간다.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윈스턴’의 노력 또한 결국 당국에게 발각당해 실패로 돌아가면서 소설은 끝이 난다.

‘1984’에는 ‘빅 브라더’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를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절대 권력으로 인식한다. 거리마다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고, 그의 초상화 속 눈동자는 마치 사람을 따라다니는 느낌마저 든다고 작중에서 묘사된다. 사람들은 ‘빅 브라더’가 실존 인물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당국이 조작해 낸 허상의 인물에 불과했다.

‘동물농장’ 역시 독재의 실상을 비판한다. 동물들은 자신들을 착취하던 인간 농부를 쫓아내고 이상적인 농장을 꿈꾸지만, 새로운 지도자인 돼지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오히려 상황은 암울하게 흘러간다. 동물들의 평등한 삶을 이루기 위해 만들었던 칠계명 중 하나인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나,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문구로 바뀌기까지 하나, 아무도 이의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중 ‘복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복서’라는 말도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라는 말만 되뇌이면서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할 뿐 반항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돼지들을 위해 충실하고 우직하게 일했던 ‘복서’는 몸이 쇠약해지자 도축업자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만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단지 독재에 대한 풍자뿐 아니라,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대중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데 있다. ‘1984’의 시민들은 “ $2+2=5$ ”라는 말조차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칠계명의 내용이 점차 돼지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데도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는다.

2025년, 이 작품들을 다시 읽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는 과거의 독재 정권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언론과 정보의 힘은 때로는 독재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감시와 성찰이 필요하다.

예컨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언론은 사실을 은폐했고, 2024년 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SNS 댓글, 유튜브, 대학 커뮤니티 등 표현의 창구들이 일시적으로 봉쇄되기도 했다. 이는 정보의 흐름과 국민 간의 연대를 막기 위한 시도였으며, 정부가 얼마나 언론의 힘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언론 역시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기레기’처럼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마녀사냥’과 같이 사실 확인 없는 여론 몰이로 개인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들어가 보면 AI 동영상이 유행하고 있다. 이 동영상들은 실제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장면들이 실제로 나왔던 것처럼 꾸미기도 하거나, 실존 인물이 하지 않은 일을 실제로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이었다. 몇 년 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후보였을 때 트럼프로 만든 AI 동영상이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AI라고 하기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트럼프의 말버릇, 억양, 제스처까지 그대로 따라 했던 것이다. 이미 AI 동영상은 일상을 넘어 정치로까지 분야를 넓히고 있다. 이는 ‘1984’의 ‘빅 브라더’처럼 정부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 곧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단적인 정권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까?

정답은 결국 ‘비판적 시민 의식’과 ‘연대’이다. 국민들은 SNS와 댓글, 커뮤니티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고 공유해야 한다. 혹은 의심스러운 기사나 콘텐츠는 표절 탐지 사이트나 사실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에게 ‘동물농장’의 우직한 말 복서처럼 순응만 하는 대신, 감시하고, 묻고, 고발할 수 있는 도구들과 이성 이 있다.

조지 오웰이 그려낸 ‘1984’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동물농장’의 동물들이나 ‘1984’ 속의 사람들처럼 무지하거나 침묵하는 존재도 아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안고 있는 세대이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정보’가 곧 ‘정치’가 되는 이 시대에 오웰의 경고는 더 이상 허구가 아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할 수 있다. 결국, 조지 오웰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독재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2025년, 우리는 감시당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감시보다 더 무서운 ‘맹목적인 정보 받아들이기’에 익숙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 왜곡된 진술을 따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눈과 귀로 진실을 마주하고 행동할 것인가.

기름유출과 지속가능성; 바다를 지키는 선택들

학과 약학과

이름 박서현

주제 SDG's

마냥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았다. 유년기 때의 나는 바다를 생각하면 무한히 넓고 깊은 푸르른 물이 떠올랐던 것 같다. 넓고 푸른 바다가 언제부터인가 더이상 그저 푸르기만 하지는 않다는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리기 시작했다. 바닷속 생물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안타까운 해양 유조선 사고로 인해 해안선에 기름띠가 번지고 기름을 뒤집어쓴 바닷새의 사진이 뉴스에 반복하여 등장하면서, 그저 멀리 있는 문제라고만 치부하던 해양 오염이 점점 가까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대규모 해양기름유출 사고는 단기간에 광범위한 피해를 낳는 대표적인 재난으로, 한 번 발생하면 수십 년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몇 차례의 유류 유출 사고를 통해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경험한 바가 있다. 실제로 우리 모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바다는 오랫동안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 무분별한 어획, 방치하여 바다로 흘려보낸 폐수,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쓰레기 등 대부분이 인간들의 흔적으로, 이는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히 바다가 더러워지는 것으로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해양 생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마련이다. 알게 모르게 바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식량 공급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결국 바다를 지키는 일은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즉 우리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일인 셈일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는 이러한 바다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다.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약과 기준이 만들어졌고, 각국 정부와 환경단체도 꾸준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여전히 사고는 반복되고 있고,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단지 정책과 기술의 개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결국 '사고를 줄이는 것', 즉 예방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 아무리 복구가 잘 되더라도, 한 번 파괴된 해양 생태계는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자연스레 나의 일상으로 이어졌던 것 같다. 비록 누군가가 보기에 거창한 실천은 아닐지라도, 바다를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진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에서는 해양기름유출 문제를 중심으로 바다가 겪고 있는 위기와 해양 오염의 실태를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작고도 중요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기름유출사고는 해양오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여러 번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그중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자면 1995년 전라남도 여천군 소리도 앞에서 14만 톤급 유조선 시프린스호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면서 5천여 톤의 벙커C유와 원유가 유출된 사고가 일어났고, 12년 뒤 2007년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홍콩 선적의 유조선과 삼성중공업 소속의 크레인 부선이 충돌하면서 12,547kl의 원유가 태안 인근 해역으로 유출되는 등 사고는 반복되었다. 원유 유출로 인해 해안은 검은 기름으로 뒤덮이고 양식장의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의 원상 복귀에는 최장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특히 남해와 서해는 수심이 얕고 섬들이 많아서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큰 피해로 이어져 여러 건의 크고 작은 기름유출 사건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시프린스호 사고 이후 방제 체제를 일원화하고 기업들의 재발 방지 노력,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감시 및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논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큰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시프린스호 사고 직후 해경과 해운항만청 등으로 분산된 사고수습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하는 등 민간 방제능력을 높였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후에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바뀌며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등 해양생태계 보전과 개선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DGs 세부목표와 연계하여 순천만갯벌과 같은 해양보호구역을 따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베트남에서 해양생태계 및 수질분야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기후변화대응, 방제대응, 해양 조사 등 다방면에 걸쳐 여러 나라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여러 기업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연관된 프로그램들을 실천하고 있다, 기아가 추진하는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해수부와 함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탁월한 갯벌의 복원 및 조성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네덜란드 비영리단체인 오션클린업과 해양 생태계 보호 목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기름유출과 같은 사고는 피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기름은 해양 생물의 생존 위협 뿐만 아니라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 경제에까지 장기적인 타격을 준다. 무엇보다 복구에는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지만, 그마저도 완벽한 회복이 보장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선 사고들을 되짚어 볼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돌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고 저지선 구축이 늦어져서 피해 범위가 확산되었다. 기업은 선박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정부는 신속한 방제 활동을 통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단기간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하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촉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애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양 보호의 시작이다.

해양오염 문제는 사실상 우리의 일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해양 생태계는 기름 외에도 수많은 바다 폐기물과 그 폐기물에서 분해되어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일회용품의 사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사용 후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컵이나 포장지, 빨대 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하수구를 지나 강을 타고 결국 바다에 쌓이게 된다. 이렇듯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건 단순한 환경 보호 캠페인이 아닌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직접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다. 나부터도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보다는 텀블러를 사용하고 포장 없는 제품을 선택하며 가급적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을 고르는 등,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더라도 이러한 사소한 선택을 잊지 않으려 노력 중이다.

해양오염은 큰 재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원인과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사회적 협력 또한 중요하지만, 결국 지속 가능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 한명 한명의 작은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한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절반 이상이 바다인 만큼 더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우리의 노력이 모인다면 비로소 바다는 다시 푸른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2025학년도 1학기 교육혁신원 공모전 모음집

발행일 | 2025. 8. 4.
발행처 |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학습개발지원팀
01795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다니엘관 508호
TEL. 02-3399-3376
E-mail. ctl@syu.ac.kr
편집 및 디자인 | 김유나(아트앤디자인 22)

본 책자에 실린 내용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재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